

충남 연구

Chungnam Studies

2022

통권 10호 (6권 2호)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홍성호

충남 청년 임금격차 실태
강수현

충남권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및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
황광훈

충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평등 의식 변화 분석연구
: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이행찬 · 유은비 · 김예은

인구이동과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
박동규 · 홍성호

목 차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 홍성호	1
충남 청년 임금격차 실태 / 강수현	21
충남권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및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 / 황광훈	37
충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평등 의식 변화 분석연구 -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 / 이행찬·유은비·김예은	61
인구이동과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 / 박동규·홍성호	85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칙	103
학술지 연구윤리규칙	121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An empirical analysis of Chungnam citizens'
offshore consumption and policy implication*

홍성호**

Sunghyo Hong**

* 이 논문은 연구보고서(2021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도민의 삶과 정책)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shong11@kongj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BSTRACT

충남은 2000년대 초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이후에는 상당히 둔화된 실정이다. 이는 지역 내 생산활동을 통한 지역소득이 지역에 재투자 혹은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된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본 논문은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과 역외 소비 여부 및 소비장소의 결정요인을 충남사회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로 높지 않으며, 도내 시군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충남도민 가운데 28.5%가 지난 1년동안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거주하는 시군의 인근 대도시에서 이러한 역외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외 소비와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Chungcheongnam-do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early 2000s, but the growth has slowed considerably since then. It is claimed that such regional economic growth pattern has been affected in some parts by the outflow of regional income earned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region instead of being reinvested or consumed in its origin.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e consumption of Chungnam provincial residents and the determinants of offshore consumption and places where consumption occurs using raw data of Chungnam social surve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degree to which consumers in Chungnam are satisfied is not as high as 11th among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in Chungnam. In particular, 28.5% of Chungnam residents have experienced offshore consumption in the past year, and it appears that such offshore consumption occurs mainly in large cities near the city and county where they live. In order to minimize the outflow of regional inco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related to offshore consumption, measure and monitor them annually through the Chungnam social survey, and reflect them in related policies.

주 제 어 KeyWords

역외 소비, 소비생활 만족, 지역소득, 충남사회조사

Offshore consumption, satisfaction in consumption, regional income, Chungnam social survey

I. 서론

충남은 수도권 인접의 지리적 이점(advantage) 등으로 과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일례로, 1999~2009년의 기간에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7.48%로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2009~2019년의 기간에는 단지 3.12%의 연평균 성장률로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 또한 최근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에 있어 충남은 2019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들 가운데 13위로 낮은 수준이며, 인근 세종(1위), 대전(3위), 충북(11위), 전북(12위) 등과의 비교에서도 낮은 편에 해당한다.¹⁾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함께 생활여건에 있어서의 만족 역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에서 충남의 만족감은 3.428로 광역시도들 가운데 11위에 그치며, 이를 세분화하는 경우 의료부문에서 12위, 사회보장부문에서 14위, 문화여가 부문에서 11위로 나타난다.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과 부, 일자리, 주택여건과 주택의 질,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숙련, 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의 경우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5위인 반면에 소비생활 만족도가 11위에 불과해 충남 도내 소비를 위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²⁾ 소비자로서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 자체도 문제이나 이러한 낮은 만족도가 자칫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를 증가시켜 도내 소비가 감소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충남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해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어떠한 속성을 지닌 도민에게서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보다 크며, 타 지역들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각각 이항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충남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주로 기업 잉여금의 타 지역 유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박경, 2011; 정재준, 2018; 홍성호·임준홍, 2014). 하지만, 본 논문은 충남 도민 개별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통해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 지역 간 주관적 만족감의 수치적 차이는 크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2018년의 주관적 만족감 역시 충남은 3.301로 16위에 불과하여 충남도민의 낮은 주관적 만족감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2) 통계청 사회조사(2019년 자료)의 광역시도별 소비생활 만족도에서도 충남은 5점 만점에서 평균 2.77점으로 세종(2.98점), 강원(2.82점), 전북과 전남(2.81점), 인천과 제주(2.80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은 역외 소비와 지역성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과 분석자료에 대해 기술한다. 제3장은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 및 역외 소비 현황과 역외 소비 여부 및 소비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이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Christaller(1966)와 Losch(1954)에 의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의하면, 도시들 간 규모에서의 차이와 이로 인한 소비재 다양성에서의 차이로 도시들 간 위계(hierarchy)가 나타난다. 재화나 서비스는 초기 생산설비의 비용(setup cost)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생산에 있어 상이한 규모의 경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고정비용이 큰 경우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생산량의 규모가 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고정비용이 작은 경우, 소규모의 생산 하에서도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 1인당 수요(per-capita demand)에 있어서도 재화와 서비스 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발(hair-cut)은 통상 사람들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정도 수요하는 반면에 뇌수술(brain surgery)은 평생에 한 번 소비하거나 전혀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O'Sullivan(2018)에서와 같이, 뇌수술의 큰 고정비용으로 인해 뇌수술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큰 수요가 필요한 반면에 뇌수술의 1인당 수요는 작기 때문에 뇌수술병원은 대도시에 입지해야 한다. 한편, 이발의 작은 고정비용은 이발소의 유지에 큰 수요를 필요하지 않으며 이발의 1인당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발소는 작은 도시에도 입지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의 규모에 따라 소비가능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이하여 도시들 간 소비활동에 있어 위계가 존재한다. 결국, 보다 작은 도시 혹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예를 들면, 뇌수술-의 소비행위가 타 지역-이를테면, 인근 대도시-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소비행태로 인해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게 된다.

박경(2011)은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을 산출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대비 총소득의 비율에서 충남은 6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100%를 넘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³⁾ 또한,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율에 있어

3)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충남의 분공장(branch plant) 경제구조가 지적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이 기업유치와 외생적 성장전략 기조에서 탈피하여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다. 분공장은 연구개발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며(Morgan, 1991; Rees, 1979; Vernon, 1966), 일

전국적으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하락함을 제시한다. 서선애·김은지(2020) 역시 소득 역외 유출 규모를 산출하며, 2019년 자료에서도 충남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쇼핑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을 제시한다. 정재준(2018)은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내총생산의 역외 유출을 산출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80%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제시한다.

2000년대 초반 충남 지역경제 규모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민간소비의 상대적 감소는 충남의 경제성장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규모의 확대가 지역 내 서비스산업-특히,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순순환적인 지역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실증적으로, 이종하·이상호(2021)는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일(2008)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도시와 비도시 간 비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비도시 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가 보다 많아지면서 역외 소비지출이 증가함을 제시한다.⁴⁾ 이는 생산측면에서 분공장 경제를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비생활 여건을 포함하여 근로자 혹은 그 가족들의 정주여건 역시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함을 함축한다.

본 논문에서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의 시군들 가운데 보다 도시화된 타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 역외 소비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를테면,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와 대전시에 인접하며 공주시가 도시화 정도에 따른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쇼핑 인프라가 보다 잘 갖춰진 이들 인접지역에서 일부 소비행위가 이뤄질 것이다.⁵⁾ 이러한 현상은 대전시에 인접한 금산군과 계룡시, 군산시에 인접한 서천군,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지에서 이주해 온 경우 거주지역에서의 소비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내 거주기간이

자리의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Sonn and Lee, 2012),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Munday, 2000; MacKinnon and Phelps, 2001). 또한, 지역산업과의 연계(Turok, 1993) 혹은 파급효과(Harris and Robinson, 2004)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호·임준홍(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법인의 분공장은 1,859개소에 이르며 수도권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 내 타 광역시도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충청권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에 입지하여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비율에서 충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함축한다. 다만, 분공장 경제구조가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임금, 부가가치, 생산이 분공장에서 오히려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4) 충남의 금산군과 대전시 간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금산군 내 대기업인 H사 근로자의 상당수가 대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5) 특히, 공주시에선 대형 할인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역외 소비의 경향이 보다 뚜렷할 것이다.

길수록, 지역 내 소비시설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나 지역 내 상인과의 거래관계 형성이 보다 활발하여 역외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쇼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을수록, 역외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 개인의 속성별로는 젊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보다 젊을수록 소비를 위한 이동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지닌 경우 타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한 통행관련 물리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감수할 여력이 보다 크기 때문에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충남도민 가운데 어느 집단에서 역외 소비가 빈번하고 어느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j = \alpha + X_j\beta + \epsilon_j \quad (1)$$

여기서, X_j 는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 j 의 거주지(개별 시군, 읍면동 여부), 연령, 성,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소비지출액, 1인 가구 여부, 도내 거주기간, 지역 내 쇼핑시설에 대한 불만족 여부 등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y_j 는 이항로짓모형에서 역외 소비 여부를 나타내거나 다항로짓모형에서 소비 지역을 나타낸다. 이항로짓모형에서, y_j 는 역외 소비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반면, 다항로짓모형에서 y_j 는 소비 지역을 나타내며 도내 0, 서울 1, 인천 2, 경기 3, 대전 4, 세종 5, 충북 6, 전북 7, 그 외 8의 값을 갖는다.

2) 자료와 변수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충남사회조사 2017년, 2019년, 2021년 원자료를 이용한다. 본 조사는 2012년에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매년 조사되어 오고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 거주 15,000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이다. 2021년의 경우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25,128명에 이른다.

역외 소비 행태는 ‘귀하는 최근 1년간 충청남도 외 지역에서 소비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온라인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한 경험에만 한정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 문항을 통해 역외 소비 지역, 주요 소비품목, 주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소비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과 같이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III. 실증분석 결과

1. 충청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

충남도의 충남사회조사에 의하면, 5점 척도의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4점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9년에 19.5%에서 2021년에 21.2%로 상승하였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에서만 22.8%에서 19.5%로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권역들에서는 모두 상승하였다. 한편, 정주여건 가운데 하나인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을 나타내는 비중이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 25.8%에서 2019년 27.8%, 그리고 2021년 33.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개별 권역에 있어서도 서해안권을 제외하면, 충남 전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서해안권의 경우 2017년에 28.3%에서 2019년에 26.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30.8%로 상승하였다.

〈표 1〉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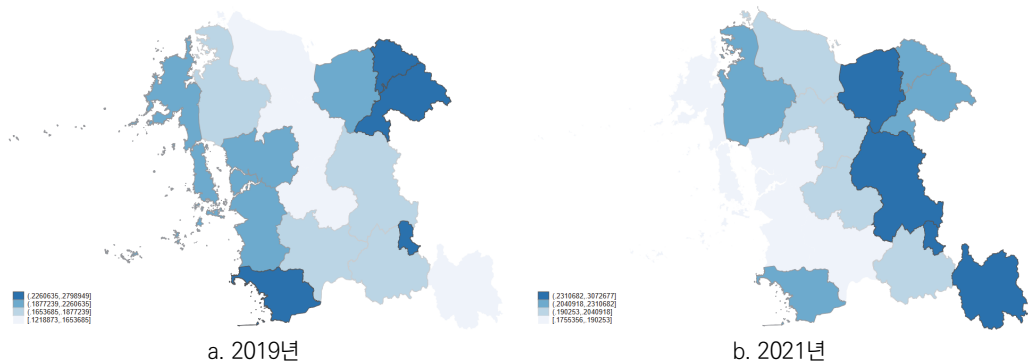
지역	소비생활 만족도		쇼핑시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용에 대한 만족도		
	2019	2021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19.5	21.2	25.8	27.8	33.6
북부권	19.7	21.6	28.6	30.4	34.9
서해안권	22.8	19.5	28.3	26.7	30.8
내륙권	18.2	22.0	19.3	23.4	30.9
금강권	17.8	20.7	27.5	31.1	38.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쇼핑시설 만족도의 경우 2017년과 2019년은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7점 이상의 비중이고, 2021년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시군별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우 2019년에 천안시, 서천군, 계룡시에서 상대적으로 만족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2021년의 경우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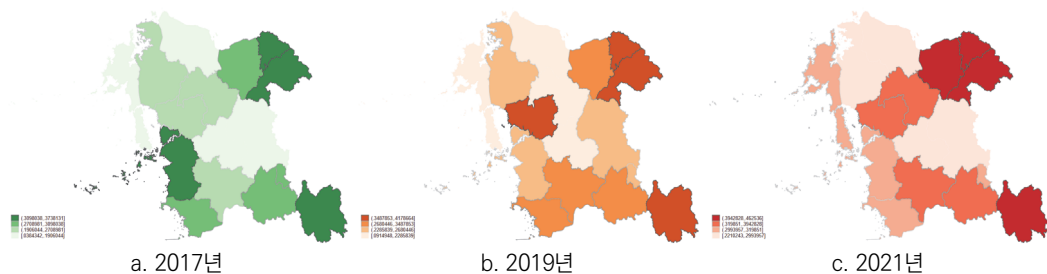
〈그림 1〉 충남 시군별 소비생활 만족도



주 : 5점 척도(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9, 2021

시군별 쇼핑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의 2017-2021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면, 천안시와 금산군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에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태안군은 최근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만족하는 비중은 당진시, 공주시, 청양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계룡시 등의 순으로 낮았고, 금산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논산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충남 시군별 쇼핑시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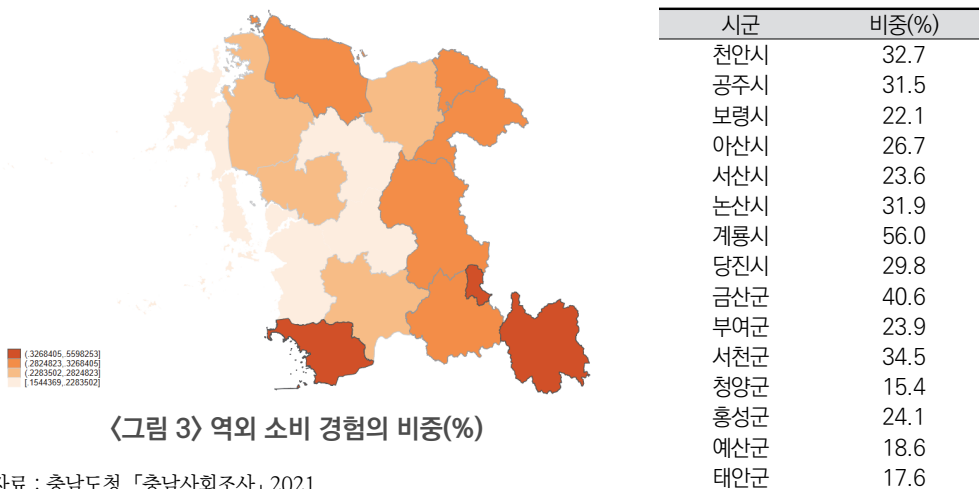


주 : 2017년과 2019년은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7점 이상의 비중이고, 2021년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11위) 이는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도내 시군 간에도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군별로 역외 소비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

충남도민 전체적으로 28.5%가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권역별로는 북부권 28.6%, 서해안권 25.0%, 내륙권 28.3%, 금강권 32.1%로 나타난다. 시군별로는 계룡시에서 56.0%로 가장 높고, 금산군 40.6%, 서천군 34.5%, 천안시 32.7%, 논산시 31.9%, 공주시 31.5%로 높게 나타난다. 앞에서,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 지역에서 대체로 높았음을 상기할 때,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도내 지역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만족도가 지역 내 소비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기인하지 않고 역외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기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충남도의 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역외 소비 지역별 주요 소비 품목을 살펴보면, 충남도민이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의류 및 잡화(34.9%), 식료품(17.8%), 문화/여가서비스(12.7%), 외식서비스(12.6%) 등에 해당하고, 대전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류 및 잡화(29.8%)와 식료품(26.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의료·보건서비스(15.4%)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세종, 충북, 그리고 전북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공통적으로 식료품이 가장 높으며, 특히 세종의 경우

55.8%로 매우 높다.

〈표 2〉 역외 소비 지역별 주요 소비 품목의 비중(%)

주요 소비 품목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식료품	17.8	26.9	55.8	34.0	38.7
의류 및 잡화(정장, 신발, 가방 등)	34.9	29.8	18.0	8.5	25.0
가정용품(가구, 침구, 주방용품 등)	3.4	3.9	2.6	0.7	3.2
미용용품(화장품, 헤어/네일/피부용품 등)	0.9	1.0	0.4	0.7	0.8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0.6	0.2	0.0	0.0	0.0
가전제품(가전, 컴퓨터 등)	2.1	2.6	0.9	0.0	1.4
건강용품(영양제, 건강기기 등)	1.5	0.7	0.2	0.7	0.2
외식서비스(한식, 양식, 카페 등)	12.6	10.1	11.1	20.6	13.2
문화/여가서비스	12.7	7.2	6.0	29.1	6.7
교육서비스	0.7	0.7	0.2	0.7	0.8
의료·보건서비스	11.1	15.4	3.6	4.3	9.5
이미용 및 뷰티서비스(미용실, 피부관리 등)	0.3	0.6	0.2	0.7	0.2
자동차서비스	1.0	0.8	1.1	0.0	0.6
기타	0.7	0.1	0.0	0.0	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역외 소비 지역별 역외 소비의 주된 이유는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의 경우에는 '주요 활동지(근무지, 학교 등)가 다른 곳에 있어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다소 상이함을 볼 수 있다.

〈표 3〉 역외 소비 지역별 주된 이유의 비중(%)

주된 이유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주요 활동지(근무지, 학교 등)가 다른 곳에 있어서	12.3	8.6	8.8	24.1	7.7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서	39.1	46.4	48.7	17.0	40.6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보다 좋아서	13.2	14.7	10.9	6.4	5.0
가격이 충청남도 지역보다 저렴해서	9.5	6.6	6.6	9.9	7.3
거주지 인근에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서	17.3	20.7	19.9	14.2	26.3
기타	8.6	3.1	5.1	28.4	13.1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9.5%가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지역은 대전(39.4%), 서울(26.4%), 경기(10.2%), 전북(10.1%) 등으로 분포하고, 주요 소비 품목은 의료·보건서비스(33.2%), 식료품(27.0%), 의류 및 잡화(18.0%) 등에 해당하여,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회귀분석을 통해 어느 집단에서 역외 소비의 비중이 높고, 어느 지역에서 역외 소비가 빈번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더불어 역외 소비를 통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3.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결정요인과 지역 간 차이

1) 역외 소비 여부

역외 소비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젊거나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거나 학력수준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많거나 소비지출액이 크거나 1인 가구이거나 도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지역 내 쇼핑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15개 시군들 가운데 금산군, 서천군,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천안시 거주 도민에 비해 역외 소비의 확률이 보다 높고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상대적으로 그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는 대전시에 인접하고, 서천군은 군산시에 인접하며, 공주시는 세종시와 대전시에 인접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은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큰 인구규모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대도시에 해당하는 이들 역외 지역들에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들 간 위계가 나타난다. 중심지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작은 도시들 혹은 동일한 규모의 도시가 아닌 보다 큰 도시들로 통행하는 쇼핑경로가 보다 일반적이다.

〈표 4〉 역외 소비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추정계수	강건한(robust) t-값	한계효과
시군(기준 : 천안시)			
공주시	0.4945**	(6.41)	0.074
보령시	0.0191	(0.22)	0.003
아산시	-0.4021**	(-5.81)	-0.061
서산시	-0.3289**	(-4.42)	-0.050
논산시	0.6891**	(8.73)	0.104
계룡시	0.8395**	(9.32)	0.126
당진시	-0.1481*	(-1.96)	-0.022
금산군	1.4535**	(16.60)	0.219

	추정계수	강건한(robust) t-값	한계효과
부여군	0.3771**	(4.14)	0.057
서천군	1.1833**	(14.16)	0.178
청양군	-0.1661	(-1.59)	-0.025
홍성군	-0.1274	(-1.49)	-0.019
예산군	-0.1525+	(-1.65)	-0.023
태안군	-0.0762	(-0.74)	-0.011
동읍면(기준 : 동)			
읍	-0.0877+	(-1.74)	-0.013
면	-0.0604	(-1.28)	-0.009
연령대(기준 : 15~19세)			
20~29세	2.4073**	(16.87)	0.362
30~39세	2.1757**	(14.75)	0.328
40~49세	1.9406**	(13.24)	0.292
50~59세	1.5602**	(10.49)	0.235
60세 이상	1.2228**	(8.02)	0.184
남성	-0.2053**	(-6.03)	-0.031
혼인상태(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3362**	(5.08)	0.051
사별	-0.4713**	(-4.46)	-0.071
이혼	-0.0381	(-0.41)	-0.006
학력(기준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3785**	(4.69)	0.057
고졸 이하	0.9282**	(13.10)	0.140
대학 이상	1.4716**	(19.64)	0.222
가구소득(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0777	(0.64)	0.012
100~200만원 미만	0.2294+	(1.78)	0.035
200~300만원 미만	0.4270**	(3.25)	0.064
300~400만원 미만	0.4611**	(3.44)	0.069
400~500만원 미만	0.6508**	(4.70)	0.098
500~600만원 미만	0.6086**	(4.25)	0.092
600~700만원 미만	0.6210**	(4.11)	0.093
700~800만원 미만	0.9996**	(6.31)	0.150
800만원 이상	1.0363**	(6.85)	0.156
소비지출액(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160	(1.09)	0.017
100~200만원 미만	0.3018**	(2.63)	0.045
200~300만원 미만	0.4043**	(3.37)	0.061
300~400만원 미만	0.4960**	(4.00)	0.075
400~500만원 미만	0.5793**	(4.38)	0.087

	추정계수	강건한(robust) t-값	한계효과
500~600만원 미만	0.7166**	(4.84)	0.108
600~700만원 미만	0.5241**	(3.15)	0.079
700~800만원 미만	0.6943**	(3.19)	0.105
800만원 이상	0.7008**	(3.88)	0.105
1인 가구	0.4419**	(7.86)	0.067
도내 거주기간(기준 : 1년 미만)			
1~2년 이하	-0.3230*	(-2.24)	-0.049
2~5년 이하	-0.4051**	(-3.62)	-0.061
5~10년 이하	-0.6010**	(-5.67)	-0.090
10~20년 이하	-0.6973**	(-6.76)	-0.105
20년 초과	-0.9352**	(-9.54)	-0.141
쇼핑시설에 불만족	0.5932**	(16.29)	0.089
상수항	-4.0042**	(-19.54)	
관측수	24,963		
Pseudo R-squared	0.230		
Log-L	-11,474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2) 소비 지역

소비 지역 선택에 대한 다중로짓모형은 회귀식 (1)에서 종속변수인 y_j 가 0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지며, 이는 주요 소비 지역을 나타낸다. 0은 도내 소비를 나타내고 1~8까지는 역외 소비 지역들인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리고 그 외 지역을 각각 나타낸다. 이에 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태안군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소비에 비해 서울에서의 소비의 가능성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진시나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에서의 소비에 비해 인천에서 소비할 확률이 도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대적 확률은 소비 지역이 경기인 경우 천안시, 대전인 경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세종인 경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충북인 경우 천안시, 그리고 전북인 경우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내 개별 시군에 대해 소비여건과 관련한 해당 외지-이를테면, 공주시와 세종시-와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5〉 역외 소비시 지역(도내 소비 대비)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시군 (기준 : 천안시)								
공주시	-1.23** (-6.63)	-0.41 (-0.89)	-1.77** (-7.47)	2.26** (13.82)	3.69** (15.70)	-1.25* (-2.33)	-0.91+ (-1.69)	-0.91** (-2.95)
보령시	-0.06 (-0.49)	0.25 (0.67)	-0.92** (-5.37)	1.42** (7.82)	0.44 (1.20)	-0.94* (-2.12)	1.36** (5.65)	-0.36 (-1.45)
아산시	-0.37** (-3.66)	0.29 (1.05)	-0.57** (-5.56)	-0.08 (-0.43)	-0.44 (-1.36)	-0.84** (-2.99)	-0.50+ (-1.75)	-0.30+ (-1.92)
서산시	0.10 (1.05)	1.05** (4.13)	-1.16** (-8.57)	0.10 (0.49)	-0.78+ (-1.88)	-1.40** (-3.66)	-0.56+ (-1.71)	-0.75** (-3.51)
논산시	-0.57** (-3.50)	-0.92 (-1.51)	-1.60** (-6.53)	3.17** (20.21)	1.51** (5.13)	-1.76* (-2.44)	1.32** (5.20)	-0.33 (-1.19)
계룡시	-0.68** (-3.76)	-0.91 (-1.45)	-1.32** (-6.33)	3.45** (21.20)	0.89* (2.55)	-0.42 (-1.06)	0.04 (0.11)	0.41+ (1.84)
당진시	0.07 (0.72)	1.25** (5.10)	-0.57** (-4.89)	-0.35 (-1.49)	-0.42 (-1.11)	-0.46 (-1.57)	-0.50 (-1.50)	-0.25 (-1.38)
금산군	-1.16** (-4.12)	-1.55 (-1.50)	-1.42** (-5.14)	4.27** (25.72)	0.07 (0.11)	-0.26 (-0.46)	0.28 (0.57)	0.02 (0.07)
부여군	-0.64** (-3.47)	-1.33+ (-1.79)	-1.69** (-6.73)	2.71** (15.72)	1.68** (5.50)	-0.75 (-1.34)	1.53** (5.49)	0.12 (0.41)
서천군	-0.88** (-3.65)	-1.60 (-1.56)	-2.17** (-5.53)	0.79** (2.77)	0.08 (0.13)	-1.58 (-1.51)	4.88** (21.46)	-0.71 (-1.35)
청양군	-0.41* (-2.28)	0.10 (0.23)	-1.38** (-6.07)	1.53** (7.58)	1.81** (6.09)	-1.29+ (-1.74)	-0.08 (-0.17)	-0.66 (-1.64)
홍성군	0.09 (0.74)	0.24 (0.76)	-1.08** (-7.12)	1.36** (7.62)	0.39 (1.17)	-1.64** (-2.66)	-0.49 (-1.24)	-0.34 (-1.45)
예산군	0.05 (0.40)	0.87** (2.92)	-0.88** (-5.53)	0.97** (4.67)	-0.70 (-1.23)	-0.68 (-1.45)	-0.10 (-0.24)	-0.53+ (-1.77)
태안군	0.35* (2.49)	0.96** (3.16)	-0.88** (-4.94)	0.18 (0.60)	-1.64 (-1.59)	-2.11* (-2.03)	-0.08 (-0.18)	-0.22 (-0.73)
동읍면 (기준 : 동)								
읍	-0.22** (-2.71)	0.27 (1.52)	0.23** (2.61)	-0.23* (-2.55)	-0.13 (-0.71)	-0.52* (-2.11)	-0.21 (-1.11)	-0.36* (-2.53)
면	-0.16* (-2.12)	0.06 (0.35)	0.38** (4.18)	-0.14+ (-1.74)	-0.01 (-0.10)	-0.18 (-0.71)	-0.22 (-1.17)	-0.79** (-5.12)
연령대 (기준 : 15~19세)								
20~29세	2.05** (9.14)	2.44** (3.22)	2.51** (6.55)	2.25** (9.79)	3.84** (3.81)	2.98** (2.82)	3.26** (5.39)	2.60** (4.26)
30~39세	1.61** (6.84)	1.90* (2.48)	2.55** (6.56)	2.23** (9.35)	3.74** (3.68)	2.64* (2.44)	2.54** (4.07)	2.62** (4.26)
40~49세	1.34** (5.66)	1.91* (2.49)	2.17** (5.59)	1.91** (8.11)	3.34** (3.27)	1.94+ (1.81)	2.96** (4.78)	2.48** (4.03)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50~59세	1.27** (5.28)	1.50+ (1.93)	1.73** (4.41)	1.44** (6.01)	2.36* (2.30)	1.75 (1.62)	2.25** (3.59)	2.12** (3.41)
60세 이상	1.32** (5.36)	1.49+ (1.91)	1.27** (3.16)	1.10** (4.55)	1.87+ (1.82)	1.22 (1.10)	1.08+ (1.69)	1.45* (2.24)
남성	-0.36** (-6.29)	-0.02 (-0.17)	-0.08 (-1.23)	-0.29** (-5.20)	-0.12 (-1.13)	-0.09 (-0.50)	-0.06 (-0.59)	0.01 (0.08)
혼인상태 (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04 (-0.36)	0.59* (2.44)	0.32** (2.67)	0.39** (3.50)	1.04** (4.49)	0.71* (2.19)	0.96** (4.46)	0.44* (2.52)
사별	-0.51** (-2.82)	-0.50 (-1.01)	-0.61* (-2.35)	-0.38* (-2.20)	0.49 (1.28)	-0.13 (-0.15)	-0.21 (-0.60)	-1.53* (-2.47)
이혼	-0.16 (-1.09)	0.27 (0.77)	0.09 (0.51)	-0.16 (-0.98)	0.30 (0.87)	0.44 (0.93)	0.37 (1.30)	-0.16 (-0.59)
학력 (기준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46** (2.77)	0.25 (0.68)	0.39* (1.96)	0.30* (2.28)	0.60* (1.97)	0.78 (1.05)	0.44* (2.03)	-0.79 (-1.47)
고졸 이하	1.07** (7.38)	0.90** (2.99)	0.81** (4.55)	0.82** (7.39)	0.83** (3.04)	1.41* (2.09)	0.84** (4.31)	0.92** (2.62)
대학 이상	1.86** (12.47)	0.86** (2.68)	1.18** (6.43)	1.48** (12.52)	1.36** (4.82)	1.76** (2.59)	1.33** (6.22)	1.30** (3.63)
가구소득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1 (-0.50)	0.03 (0.05)	0.10 (0.39)	0.28 (1.32)	0.18 (0.35)	0.32 (0.38)	0.07 (0.18)	0.20 (0.47)
100~200만원 미만	0.35 (1.59)	0.15 (0.30)	0.00 (0.00)	0.44* (1.96)	0.49 (1.01)	0.92 (1.19)	-0.37 (-0.83)	0.29 (0.71)
200~300만원 미만	0.40+ (1.79)	0.33 (0.68)	0.22 (0.79)	0.65** (2.81)	0.98* (1.99)	1.29+ (1.66)	-0.08 (-0.18)	0.27 (0.65)
300~400만원 미만	0.45* (2.02)	0.42 (0.87)	0.15 (0.54)	0.74** (3.16)	0.72 (1.46)	0.54 (0.68)	-0.07 (-0.14)	0.73+ (1.74)
400~500만원 미만	0.63** (2.71)	0.83+ (1.68)	0.51+ (1.76)	0.71** (2.91)	0.83+ (1.65)	1.27 (1.57)	0.39 (0.85)	0.86+ (1.95)
500~600만원 미만	0.53* (2.21)	0.89+ (1.75)	0.40 (1.35)	0.86** (3.47)	0.41 (0.79)	0.54 (0.64)	0.10 (0.20)	1.14** (2.61)
600~700만원 미만	0.53* (2.12)	0.55 (0.98)	0.30 (0.96)	0.83** (3.17)	1.09* (2.05)	1.21 (1.44)	0.35 (0.69)	1.18** (2.58)
700~800만원 미만	1.03** (4.03)	0.99+ (1.74)	0.78* (2.48)	1.14** (4.11)	1.26* (2.33)	2.18** (2.64)	0.41 (0.79)	1.25** (2.64)
800만원 이상	1.21** (4.97)	0.43 (0.77)	0.56+ (1.75)	1.22** (4.65)	1.40** (2.63)	1.97* (2.35)	0.40 (0.80)	1.49** (3.30)
소비지출액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8 (0.91)	-0.24 (-0.54)	-0.11 (-0.44)	0.12 (0.66)	0.18 (0.42)	-0.43 (-0.73)	0.46 (1.35)	0.03 (0.09)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100~200만원 미만	0.24 (1.19)	0.12 (0.26)	0.10 (0.39)	0.22 (1.10)	0.30 (0.70)	-0.52 (-0.91)	1.29** (3.39)	0.13 (0.36)
200~300만원 미만	0.35+ (1.68)	0.16 (0.35)	0.22 (0.83)	0.36+ (1.66)	0.57 (1.29)	-0.17 (-0.29)	1.19** (3.01)	0.07 (0.20)
300~400만원 미만	0.39+ (1.82)	0.29 (0.61)	0.22 (0.83)	0.47* (2.14)	0.88+ (1.96)	0.22 (0.36)	1.29** (3.26)	0.14 (0.36)
400~500만원 미만	0.71** (3.16)	-0.43 (-0.82)	0.44 (1.58)	0.48* (2.07)	0.99* (2.10)	-0.75 (-1.10)	1.51** (3.58)	0.07 (0.19)
500~600만원 미만	0.78** (3.22)	0.21 (0.38)	0.64* (2.12)	0.73** (2.86)	0.38 (0.74)	-0.45 (-0.60)	1.42** (2.81)	0.06 (0.13)
600~700만원 미만	0.36 (1.33)	0.17 (0.26)	0.26 (0.77)	0.77** (2.68)	0.82 (1.44)	-1.03 (-1.23)	1.63** (3.10)	-0.15 (-0.30)
700~800만원 미만	0.78* (2.32)	-13.7** (-26.31)	0.96* (2.53)	0.50 (1.52)	0.38 (0.54)	0.15 (0.18)	1.00 (1.47)	0.06 (0.10)
800만원 이상	0.87** (3.17)	0.87 (1.55)	0.53 (1.45)	0.52+ (1.74)	0.09 (0.14)	-0.36 (-0.42)	1.91** (3.89)	-0.30 (-0.55)
1인 가구	0.46** (5.06)	0.52** (2.71)	0.24* (2.15)	0.29** (3.04)	0.48** (2.67)	0.34 (1.15)	0.64** (3.64)	0.91** (5.89)
도내 거주기간 (기준 : 1년 미만)								
1~2년 이하	-0.09 (-0.48)	0.20 (0.57)	-0.40+ (-1.72)	-0.30 (-1.24)	-0.10 (-0.22)	0.12 (0.22)	-0.40 (-0.88)	-1.25** (-3.56)
2~5년 이하	-0.13 (-0.83)	-0.47 (-1.55)	-0.45* (-2.51)	-0.29 (-1.49)	-0.50 (-1.33)	-0.15 (-0.32)	-0.35 (-1.04)	-0.85** (-3.73)
5~10년 이하	-0.55** (-3.57)	-0.86** (-2.98)	-0.60** (-3.55)	-0.21 (-1.10)	-0.44 (-1.26)	-0.77 (-1.63)	-0.88** (-2.66)	-0.93** (-4.48)
10~20년 이하	-0.66** (-4.40)	-0.94** (-3.30)	-0.90** (-5.39)	-0.32+ (-1.74)	-0.40 (-1.19)	-0.17 (-0.40)	-0.56+ (-1.80)	-1.02** (-5.00)
20년 초과	-0.83** (-5.93)	-1.39** (-5.20)	-1.15** (-7.26)	-0.45** (-2.61)	-0.55+ (-1.71)	-1.08* (-2.46)	-0.74* (-2.56)	-1.70** (-8.83)
쇼핑시설에 불만족	0.53** (8.93)	0.77** (6.13)	0.67** (9.41)	0.72** (12.24)	0.56** (5.00)	0.22 (1.12)	0.40** (3.62)	0.51** (4.73)
상수항	-4.71** (-14.56)	-7.17** (-7.52)	-4.66** (-9.42)	-7.23** (-19.82)	-10.2** (-8.78)	-7.76** (-5.62)	-8.87** (-11.18)	-6.02** (-8.0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3) 지역 간 차이

비록 다항로짓모형이 개별 응답자의 속성에서의 차이를 통제하지만,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러하지 않은 지역 간 성향점수매칭에 의해 지역 간 역외 소비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경우 그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대전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경우(36.7%)가 아산시나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1.9%와 매칭 후 0.7%)에 비해 36.0%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a〉 대전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금산군	아산시/당진시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367	0.019	0.348	0.008	42.49
여	0.367	0.007	0.360	0.016	23.1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세종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경우(15.5%)가 서산시나 태안군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0.3%와 매칭 후 0.3%)에 비해 15.3%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b〉 세종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공주시	서산시/태안군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155	0.003	0.153	0.007	23.29
여	0.155	0.003	0.153	0.009	16.58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전북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경우(30.7%)가 공주시와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0.5%와 매칭 후 0.1%)에 비해 30.6%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c〉 전북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서천군	공주시/서산시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307	0.005	0.302	0.008	38.66
여	0.307	0.001	0.306	0.013	24.05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IV. 결론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중간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에 충남도민의 소비생활과 쇼핑시설에 대한 이용에 있어 만족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충남도민 4명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은 지난 1년간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군별로 역외 소비 경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비생활의 만족이 해당 지역 내 소비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인근 역외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관련 민간 소비시설과 서비스의 유치를 위해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역외 소비의 비중, 소비 지역, 소비 품목은 도내 시군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충남도민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도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내 시군들 가운데 대도시와 인접한 경우일수록 역외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충남도는 수도권 인접의 이점(advantage)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분공장(branch plant)의 높은 비중과 직주분리 등으로 지역소득의 상당부분이 역외-특히, 수도권-로 유출되어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충남도 정책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이며,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생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생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측면에서도 역외 소비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은 역외 소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행정은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사회조사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사항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의 조사는 과거 2017년 조사와 달리 온라인 소비를 제외한 오프라인 소비에 한정하여 역외 소비를 조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향후, 역외 소비관련 세부 문항-이를테면, 역외 소비 금액-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역외 소비 완화방안의 제시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외 소비지수와 같은 관리지표를 만들고 이를 매년 실시되는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시군 간 차이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관련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일. 2008. 지역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 박경. 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공간과사회*. 21(4): 83-113.
- 서선애, 김은지. 2020. “온라인쇼핑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1(6): 3-18.
- 이종하, 이상호. 2021.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정책논집*. 23(3): 125-156.
- 정재준. 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21-334.
- 홍성효, 임준홍. 2014. “분공장과 지역경제: 고용, 연구개발활동,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정책* 1(2): 131-150.
- Christaller W. 1966. *Central Places in Southern Germany*. trans. Baskin CW, Englewood NJ: Prentice Hall.
- Lo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unday M. 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Wales: Lifeline or leash?” in J. Bryan & C. Jones (eds.), *Wales in the 21st century* 39: 214-223. London: MacMillan
- O’Sullivan A. 2018. *Urban Economics* 9th ed. New York, NY : McGraw-Hill Education.
- Glaeser EL, Kolko J, Saiz A.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 27-50.
- Harris R, Robinson C. 2004. “Industri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its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plants, 1990-1998”.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 528-543.
- MacKinnon D, Phelps N. 2001. “Regional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 in Wales and north east England”. *Geoforum*. 32: 255-269.
- Morgan K. 1991.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 electronics: What are the prospects for Britai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1459-1482.
- Rappaport J. 2008. “Consumption Amenities and City Population Densit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8: 533-52.
- Rees J. 1979. “Technological change and regional shifts in American manufacturing”. *Professional Geographer*. 31: 45-54.
- Sonn J, Lee D. 2012.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Review of literatur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advanced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6(3): 243-259.
- Turok I. 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27: 401-417.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190-207.

| 논문접수일: 2022년 09월 01일
| 1차 심사일: 2022년 10월 0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04일

충남 청년 임금격차 실태

Wage Disparity Among Youth in Chungnam Province

강수현*

Suhyeon Kang*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 sh3737@cni.re.kr

(Assistant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 & Industry Research, Chungnam Institute)

요 약 ABSTRACT

본 연구는 2010~2020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충남도 청년층의 임금격차 기초실태를 분석한다. 개별청년의 구분을 통한 다양한 집단의 임금격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타일지수 분해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청년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 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임금이 더 낮은 집단, 즉 여성, 중졸 이하, 임시직 및 일용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서비스직에서의 지니계수 및 타일지수 개선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임금격차 문제는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산업별 등 요인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여전히 집단 간, 집단 내 구조적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기초한 전국추세와 달리 충남의 경우 집단 간 임금격차 문제보다 집단 내에서의 임금격차 문제에서의 개선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화 등의 제도를 통해 전체집단의 임금격차는 완화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wage disparity among young workers in Chungnam Province by using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for 2010~2020. The Theil-decomposition method is used to compare the wage gap of various groups by classifying individual youths. As the magnitude of improvement of the Gini and Theil coefficients of the group with lower average wages was higher, the wage gap has been progressing in a positive direction. The wage gap between Chungnam youth appears to have eased with time between 2010 and 2020 however, examining factor classifications such as gender,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type, and industry, reveals that a structural average wage gap remains between groups and within groups. In the case of Chungnam, in contrast to the national tr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within group wage gap more than between group wage gaps.

주 제 어 KeyWords

충남청년, 임금격차, 지니계수, 타일지수, 타일지수 분해

Chungnam Youth, Wage disparity, Gini index, Theil index, Decomposition

I. 서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시대와 함께 비수도권의 청년 순유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 살고자 하며,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청년고용률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청년 고용률은 45.3%, 비수도권의 경우 39.3%이며 청년고용률 지역간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정체상태인 것으로 구조적인 양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리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랜 구조적 문제이다. 일자리의 절대규모와 일자리 질의 상대적 우위로 청년층은 비수도권에서 유출되어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기회 및 성과의 지역별 격차는 교육 및 인적자본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과의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앞서 충남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대상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2016년 2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2019년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세부과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청년시기 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인식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시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및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자리분야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충남도에서도 2017년 별도의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후 일자리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다. 청년의 고용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며 다양한 집단 간 고용의 양과 질,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갈등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박홍철 외, 2013; 최명섭 외, 2021),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 실업 등 고용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임금불평등은 양극화 및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임금의 격차가 어떠한 요인 및 집단에서 발생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청년층의 임금격차 완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청년을 집단별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요인별 집단별로 청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최근 2020년을 기준으로 2010년과의 비교를 통해 10년간의 변화흐름을 관찰하고자 하며, 분석대상은 충남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9세~39세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격차의 크기는 노동시장 안에서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 노동시장의 비효율적 배분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대로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양극화 유발,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 생산성 악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현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층은 사회진입 초기단계로 자산이 작기 때문에 소득측면의 임금격차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은 비정규직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된 집단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요인별 실태분석은 기초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임금격차를 요소별로 분해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II. 선행 연구

임금격차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지역 격차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종합적 측면에서 국내연구 Koh(2018) 및 고영선(2019)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198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임금 불평도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임금격차의 요인분해를 통해 성별, 학력별, 경력별, 직종별 등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인한 불평등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종신 재직권, 사업장 규모 등에 의한 불평등은 보다 심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여성의 기술 수준 장려 정책, 고령 노동자를 위한 고용규제 완화, 교육수준의 격차로 인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불평등이 심화된 두 부문에 대해서는 종신재직권의 약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허식(2003)은 1999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Oaxaca(1973; 1994) 분해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과 직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았고, 고용차별보다는 임금차별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경력단절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성별 간 생산성 차이 폭을 줄이고자 제안하였다. 유정미(2017)에서는 2013년 대졸자직업이동조사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의 성별 임금격차원인을 Oaxaca(1973; 1994) 분해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여한 부분이 성별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고임금 직군 및 전문대 졸업 그룹에서 성별에 따른 차등적 보상의 영향이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청년 그룹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5분의 4규칙(Four-Fifth Rule)과 같이 통계적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인력이 가장 소수로 지목되는 분야인 공학계열에서의 여성 졸업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함도 함께 제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최강식·정진호(2003)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불완전한 대체 관계를 가정하면서 Bound and Johnson(1992), Katz and Autor(1999) 등이 사용한 CES생산함수를 통해 상대적 임금격차의 변화를 노동공급 요인과 노동수요 요인으로 분해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산업 내 고학력자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대졸자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야기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박강우(2014)는 1974~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별 임금격차의 장기변동을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으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를 상대 노동공급의 변화보다는 상대 노동수요의 변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상대 노동수요와 상대 노동공급의 변동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노동수급의 큰 추세를 이끌었음을 규명하였다.

지역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허식(2007)과 이종수(2017)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 요인을 지역별 Mincer 방식(Mincer, 1958)의 임금방정식 추정과 Oaxaca 임금분해기법(Oaxaca, 1973; 1994)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높은 경력, 정규직 또는 상용직일수록 임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육연수, 건강상태, 정규직 여부가 임금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외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별 임금격차 요인이 발생함을 규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이동 유도 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다. 충남지역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진철·정혜림(2017)은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주요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중산층 소득비중이 하락함과 동시에 계층간 이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악화된 원인으로 세계화와 기술진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영업의 부진심화, 고령층 인구증가 및 고용률 하락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강소기업 집중육성, 둘째,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 셋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정착 및 기업간 동반성장 유도, 넷째, 취약 고령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강화, 끝으로 재정분권 확대 등을 통한 역내 재분배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효철·이승복(2017)은 대전·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및 청년인력 유·출입 분석을 통해 청년 층 노동시장의 고용률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 양적성장으로의 유의미한 개선된 모습과 고용안정성의 하락을 동시에 다루며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충남 청년인력 유출입의 요인으로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내 고교 졸업 여부 등이 유출입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신동호·강수현(2020)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충남도 임금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인구특성별 임금격차 기초실태를 분석하였다. 충남 지역내 성별·근로형태별·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소득분위에 따라 분위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개별 및 평균임금이 낮은 직업군일수록 여성, 임시·일용직, 고졸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집중된 것을 보였다. 정책대상의 세분화에 따른 고용지원의 필요성 및 고용취약계층의 역량강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노력의 요구를 정책방향으로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 본 기존연구들은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격차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청년임금 격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최명섭·김준혁·최태림(2021)은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임금격차가 어떠한 요인 및 집단에서 발생하는지를 시기적으로 검토하고 청년층의 임금격차 완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의 임금격차를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2009년에 비해 2019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년임금격차 문제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청년임금격차 문제는 집단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으며, 집단 내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 4년제 대학졸업생, 서비스&판매직, 수도권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 및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은 임금격차 분석은 동일한 집단으로 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해석상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금격차를 논하고자한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지니계수의 분해는 집단 간 및 집단 내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잔차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구특성별 다양한 요인을 집단별로 구분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타일계수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집단 간 불평등 및 집단 내 불평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전체적으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특정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다면 집단 특성에 따른 세부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III.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방법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이란 소득 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소득, 인구, 고용 등 경제적 수치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지니계수, 타일계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순위규모계수(Rank Size Coefficient)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타일계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 완전 불평등한 경우를 1로 나타내며,

타일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 $\ln N$ 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지니계수와 타일계수는 각 계수의 증가·감소에 따라 지역격차가 심화·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집단 요인별 충남청년의 임금 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타일계수를 집단 간 불평등과 집단 내 불평등으로 분해하기로 한다. 불평등의 분해는 일반적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인 타일 지수를 분해한다(Mookherjee and Shorrocks(1982), Allanson(2014)).

타일지수는 식(1)과 같이 분해 될 수 있다. $GE(1)$ 는 모든 충남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타일계수이며 $GE(1)_j$ 는 집단 j 의 타일지수이다. g_j 는 집단 j 의 청년임금이 전체 청년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E_j 는 집단 j 의 평균 청년임금, E_t 는 충남 전체 청년임금의 평균이다.

$$GE(1) = \sum_{j=1}^J GE(1)_j g_j \frac{E_j}{E_t} + \sum_{j=1}^J g_j \frac{E_j}{E_t} \ln\left(\frac{E_j}{E_t}\right) \quad (1)$$

j : 성별, 종사상지위, 교육수준, 직종, 산업 등 집단구분
 E_j : 집단 j 의 청년임금 평균
 E_t : 충남 전체 청년임금 평균

결국, 식 (1)의 첫 번째 항은 각 집단 내의 불평등을 해당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그룹 내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은 한 집단의 청년임금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해당 집단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집단 간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특정 요인을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 임금격차를 집단 내와 집단 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타일계수 분해 방법은 이러한 방법론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임금격차에 대해 특정 요인별로 집단 내와 집단 간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위에서 언급한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특성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충남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료구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 청년층의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분기별, 반기별 자료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역별·성별·학력별·종사상 지위별·산업별·직업별·혼인 상태별 월평균 임금형태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조사되어 시간당 평균임금을 파악하는데

용이다. 본 분석은 월평균 및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0년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과 2020년 두 개 시점을 하반기 자료를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층은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대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설정한다.

본 고에서는 청년층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금은 제외되어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이자 고용자로 임금이 0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청년 임금격차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집단특성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대로 성별, 교육수준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구분한다. 먼저 <표 1>을 살펴보면,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충남으로 구분하여 평균임금을 비교하였다. 자료의 청년층 빈도수는 전국청년 2010년 96,029명, 2020년 76,842명, 충남청년의 경우 2010년 6,345명, 2020년 4,655명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모두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월평균임금 기준 약 31.2%, 시간평균임금 기준 약 47.4% 증가하였다. 청년층의 수도권 평균임금은 비수도권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 평균임금 대비 비수도권 평균임금 수준은 2010년 약88.3%(수도권임금 100%기준)수준에서 2020년 91.9%수준으로 향상 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수도권 임금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경우 충남청년층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지역별 청년임금 기본통계

(단위 : 만 원)

구분	2010				2020			
	월평균임금	표준편차	시간평균임금	표준편차	월평균임금	표준편차	시간평균임금	표준편차
전 체	188.57	98.35	0.97	0.55	247.49	117.65	1.43	0.69
수 도 권	202.69	107.62	1.05	0.61	259.94	128.93	1.52	0.82
비수도권	179.01	90.29	0.92	0.49	238.80	108.24	1.38	0.57
충 남	186.33	92.13	0.94	0.51	251.18	105.08	1.44	0.60

〈표 2〉에서는 충남지역 청년층의 집단별 평균임금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근로형태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집단별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일 경우, 임시직 또는 일용직일 경우, 농림어업일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대비 2020년 임금상승률로 살펴보면, 평균 53.2%의 상승률을 보이며, 집단별로 남성보다는 여성, 고졸이하의 교육수준,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일용직, 농림어업 및 제조업 등 평균임금이 낮은 집단에서의 임금증가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임금격차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지니계수도 2010년 대비 2020년 0.275에서 0.215로

불평등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충남청년 임금 불평등도가 가장 개선된 부분은 산업에서의 농림어업 분야이며, 교육수준에서 중졸이하 집단의 임금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기초통계를 통해서도 청년층의 임금격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지만, 집단 내와 집단 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타일지수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충남지역 청년임금 기본통계

(단위 : 만 원)

구분		2010		2020	
		시간평균임금	지니계수	시간평균임금	지니계수
전 체		0.94	0.275	1.44	0.215
성별	남	1.03	0.257	1.56	0.207
	여	0.78	0.271	1.26	0.200
교육	중졸이하	0.65	0.247	1.03	0.151
	고졸이하	0.80	0.271	1.29	0.220
	대학이상	1.07	0.253	1.56	0.199
직종*	사무직 및 전문가	1.04	0.261	1.51	0.195
	서비스 및 판매직	0.73	0.293	1.15	0.227
	기능직	0.96	0.247	1.61	0.192
	단순노무직	0.61	0.237	1.09	0.20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1	0.253	1.53	0.190
	임시직	0.68	0.264	1.08	0.225
	일용직	0.58	0.311	1.10	0.304
산업	농림어업	0.65	0.350	1.16	0.216
	제조업	0.99	0.260	1.72	0.199
	서비스업	0.90	0.281	1.32	0.205

* 제7차 한국표준직업 대분류 기준 사무직 및 전문가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 서비스 및 판매직 :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 기능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직 : 단순노무종사자

IV. 분석 결과

충남청년 임금의 타일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0.126에서 2020년 0.078로 10년간 청년층의 임금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청년을 대상으로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성별 타일지수 분해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기초통계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임금불평등도는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타일지수 분해결과에 따르면 성별 간(Between-group) 보다 성별

내(Within-group) 임금 불평등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성별 내 불평등도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으며, 여성내 임금불평등도는 높게 나타났다.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임금은 여전히 성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성별 간 임금격차문제와 더불어 여성 내의 임금격차 문제를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

〈표 3〉 성별 타일지수 분해결과

구분	타일지수			남성과 여성 내 불평등 Within-group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 Between-group	
	전체	남성	여성	GE(1)	(%)	GE(1)	(%)
2010	0.126	0.109	0.131	0.117	92.9	0.009	7.1
2020	0.078	0.072	0.074	0.073	93.6	0.005	6.4

청년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비정규직 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의 종사상지위별 타일지수 분해결과를 살펴본다. 기초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나타난다. 집단내 임금격차 또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은 가장 낮으면서 집단내 임금격차는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구분과 마찬가지로 세 집단 간 임금격차보다는 각 집단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구조적 양상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종사상지위별 타일지수 분해결과

구분	타일지수				종사상지위 내 불평등 Within-group		종사상지위 간 불평등 Between-group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GE(1)	(%)	GE(1)	(%)
2010	0.126	0.107	0.128	0.169	0.112	88.9	0.014	11.1
2020	0.078	0.060	0.102	0.196	0.069	88.5	0.008	11.5

〈표 5〉는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졸이하 및 전문대 이상에서보다 고등학교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층에서의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집단내에서의 임금격차가 임금불평등에 훨씬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교육수준별 타일지수 분해결과

구분	타일지수				교육수준 내 불평등 Within-group		교육수준 간 불평등 Between-group	
	전체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GE(1)	(%)	GE(1)	(%)
2010	0.126	0.102	0.122	0.109	0.114	90.5	0.012	9.5
2020	0.078	0.076	0.075	0.070	0.075	96.2	0.003	3.8

청년층이 분포한 직종에 따라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평균임금의 경우 사무직 및 전문가, 기능직, 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에 따라 임금격차는 모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구분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직종 내 불평등도의 기여도가 감소했으며 직종 간 불평등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종별 타일지수 분해결과

구분	타일지수					직종 내 불평등 Within-group		직종 간 불평등 Between-group	
	전체	사무직 및 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GE(1)	(%)	GE(1)	(%)
2010	0.126	0.115	0.146	0.101	0.094	0.112	88.9	0.013	10.3
2020	0.078	0.064	0.097	0.062	0.082	0.069	88.5	0.009	11.5

청년일자리는 지역에 위치한 산업분포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청년임금 격차를 산업별 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청년일자리의 약 60%가 서비스업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약30%가 제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산업별 평균임금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중이 적고 임금이 낮은 농림어업의 경우 임금격차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구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임금격차는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임금격차 양상은 모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산업내 임금불평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산업간 임금불평등은 0.002에서 0.008로 오히려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간 매출 및 경영 격차의 심화가 청년일자리 임금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7〉 산업별 타일지수 분해결과

구분	타일지수				산업 내 불평등 Within-group		산업 간 불평등 Between-group	
	전체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GE(1)	(%)	GE(1)	(%)
2010	0.126	0.218	0.113	0.133	0.124	98.4	0.002	1.6
2020	0.078	0.078	0.065	0.074	0.071	91.0	0.007	9.0

위에서 살펴본 충남 청년층의 주요 요인별 임금격차를 집단별로 비교하여 〈표 8〉에 나타냈다. 전체 타일 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 0.126에서 2020년 0.078로 개선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요인별로 집단 내와 집단 간 임금불평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업구분에서 집단 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니계수가 낮아짐으로써 충남 청년층의 임금격차가 완화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최명섭 외(2021) 등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임금격차가 성별, 교육수준별, 직종별로 집단 간 격차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단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산업간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 간 격차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선의 폭 크기는 집단 내 타일지수에서 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원인은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최저임금 상승,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및 문화개선이 청년층부터 임금격차가 완화되어가는 추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수준별 임금격차의 완화는 교육투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강식·조운애, 2013; 최명섭 외 2021).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08년 70.6%, 2021년 71.5%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로 대졸인력의 과잉공급이 극대화되어 대졸인력의 하향취업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4,110원에서 8,590원으로 약109.1% 증가하였다. 요인별로 살펴볼 때 종사상지위 구분에 따른 집단 내에서의 타일지수는 다른 요인에서보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충남청년의 경우 종사상지위에 따른 집단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여전히 청년층 일자리 환경에서 가장 큰 민감한 요소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산업 및 직종구분에 따른 임금격차의 경우, 산업별 집단 간 임금격차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충남은 일자리환경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열악한 이유로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충남청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표 8〉 요인별 임금격차 비교

구분	2010(A)		2020(B)		B-A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집단 내	집단 간
전 체	0.126		0.078		-0.06	
성별	0.117	0.009	0.073	0.005	-0.044	-0.004
	92.9	7.1	93.6	6.4	0.7	-0.7
교육수준별	0.114	0.012	0.075	0.003	-0.039	-0.009
	90.5	9.5	96.2	3.8	5.7	-5.7
종사상 지위별	0.112	0.014	0.069	0.009	-0.043	-0.005
	88.9	11.1	88.5	11.5	-0.4	0.4
직종별	0.113	0.013	0.069	0.009	-0.044	-0.004
	89.7	10.3	88.5	11.5	-1.2	1.2
산업별	0.124	0.002	0.071	0.007	-0.053	0.005
	98.4	1.6	91	9	-7.4	7.4

V. 요약 및 결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형태와 성별, 학력에 따라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첫 취업부터 격차가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수도권 대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지위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과의 격차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청년 취업난이나 양극화 등 관련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임금격차 기초실태를 분석하였다. 타일지수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인구 및 지역특성 등 개별청년들의 구분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임금격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지역의 청년임금격차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 시간에 따라 격차 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산업별 등 요인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여전히 집단 간, 집단 내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임금이 더 낮은 집단, 즉 여성, 중졸이하, 임시직 및 일용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서비스직에서의 임금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임금격차 개선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청년 임금격차 문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른 전국추세와 다르게 충남의 경우 집단 간 임금격차 문제보다 집단 내에서의 임금격차 문제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화 등의 제도를 통해 전체집단의 임금격차는 완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별,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직종 등 각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과 격차요인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지역 일자리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산업별 구분에서 집단 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이 청년일자리 및 임금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임금격차 완화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차이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임금격차 완화 제도의 지속적 운영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구분이 가능한 자료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나, 충남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지역 및 연령구분에 대한 데이터추출로 샘플이 작아져 다소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이나 타 지역 청년임금 격차 수준과 세부적인 비교분석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충남지역의 차별성 등의 입체적 분석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청년을 대상으로 임금격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로서 의의를 둔다. 향후, 본 연구를 보완하여 전국데이터 중심의 분석 모델과 비교한 충남의 현황분석과 청년, 중장년, 고령자 간 연령별 임금격차 원인 분석 모형 등을 통해 입체적 특성제시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정책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와 임금격차의 문제는 어느 한 순간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선. 2019.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KDI Policy Forum. (274): 1-8.
- 박강우. 2014.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1974~2011)”. *산업경제연구*. 27(1): 477-505.
- 신동호, 강수현. 2020. “충남도 임금소득 양극화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 4(1). 50-70.
-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이종수. 2017.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2): 143-171.
- 최강식, 정진호.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9(3): 183-208.
- 최명섭, 김준혁, 최태림. 2021. “우리나라 청년층의 요인별 집단별 임금격차 분해”. *국토계획*. 56(2): 159-170.
- 최효철, 이승복. 2017. “대전·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 및 청년인력 유·출입 분석”. *산업경제연구*. 30(2): 505-545.
- 허식. 2003. “산업과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원인분석”. *응용경제*. 5(3): 57-74.
- 허식. 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산업경제연구*. 20(1): 1-16.
- Lavoie M, Stockhammer E. 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Working Papers.
- Allanson, P. 2014. “Income stratification and between-group inequality”. *Economics Letters*. 124(2): 227-230.
- Bound J, Johnson G.E. 1992.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the 1980’s: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Expla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371-392.
- Dagum C. 1997. “A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Empirical Economics*. 22: 515-531.
- Mookherjee M, Shorrocks A.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368): 886-902.
- Mincer J. 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The Journal for political Economy*. 66(4): 281-302.
- Katz LF, Autor DH.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Part A): 1463-1555.
- Koh YS. 2018.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KDI policy study*.
- Oaxaca RI.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Th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 Oaxaca RI.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 5-21.
- Wolfson M. 1994. “Conceptual Issues in Normative Measurement: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 논문접수일: 2022년 09월 01일
| 1차 심사일: 2022년 09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9일

충남권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및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Wage Effect of Job Movement and Movement of
Young People in Chungnam Region

황광훈*

Kwanghoon Hwang*

*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부연구위원 | hunzzang96@keis.or.kr
(Associate Research Fellow, Job program Evaluation & Analysis Divison, Korea Employment
Informaion Service)

요 약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4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충남권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이동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일자리 이동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권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42.2%는 이직의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57.8%는 1회 이상 직장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3%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 이직자는 6.4%, 직업내 이직자는 6.4%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직에 의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중인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ovement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employed in the Chungnam area using the first through fourteenth jobs in the occupational history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Youth Panel(YP2007) and concomitant data. The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ing quality of jobs associated with employment transfer, determining that 42.2% of the youth wage workers in the Chungnam region maintained their first jobs without changing jobs, and 57.8% of them changed jobs at least once. In addition, on average, those who relocated received 6.3% lower wages than remaining workers, and it is also estimated that those who change jobs within industries and occupations receive 6.4% lower wages. Although there is an rising wage effect due to turnover, this effect is low compared to workers who keep their first jobs.

주 제 어
KeyWords

첫 직장, 일자리 이동, 임금효과

First Job, Job Movement, Wage Effect

I. 서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정과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청년층 고용 및 실업 문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어렵다. 특히, 코로나 19감염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기술발전·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유가상승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외 정치 환경의 급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각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감 및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김유빈 외, 2017; 이영민 외, 2010).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진입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청년들은 현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임금 및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나 자신의 역량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황광훈, 2018). 일자리를 처음 경험하는 청년층의 직장이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합리적인 탐색과정일 수 있다(문영만 외, 2017).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은 생애직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탐색하면서 생애직업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거친다(김미란 외, 2011; 김정숙, 2009). 하지만 짧은 기간에 빈번한 직장이동 및 조기퇴사는 숙련형성을 어렵게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영만 외, 2017; 안준기, 2015; 이병희, 2002; Light & MsGarry, 1998; Neumark, 2002).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낮은 이직률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이직률은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 손실을 초래해 생산성 하락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영만 외, 2017).

일반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가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직장이동과 임금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직장이동이 많으며 이 시기의 직장이동은 임금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다(김혜원 외, 2008). 하지만 직장이동과 임금변화의 방향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직업이동에 따른 임금격차를 강조하는 Stayer-Mover 모형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피하고자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이직을 단행하기 때문에 직업이동과 임금은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lumen, Kogan and McCarthy, 1955).

한편, 청년 고용문제는 지역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발전해 온 결과,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황광훈, 2022).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황광훈, 2022).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현상은 자연감소보다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현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 등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황광훈, 2020). 이러한 지역 고용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높은 수출 의존도와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제 및 환경 변화에 지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제 및 고용은 제조업 등 일부 주력산업에 의존적이며, 그동안 충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동차부품 및 화력발전 분야 등 주요 굴뚝산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위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통계청의 경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는 반면, 충남의 경우 2016년 이후 다소 하락국면이 발생했지만,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침체 및 둔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산업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충남이 20% 이상으로 전국 평균(16-17%)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충남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엄밀하고 동학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충남권(대전·세종 및 충남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동 및 안착(정착) 과정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등 충남권 청년취업자¹⁾의 일자리 이동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일자리 이동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 및 충남 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정리해보면, 제Ⅱ장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충남권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분포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와 실증분석 모형을 소개한 뒤, 일자리 이동을 통한 임금 효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함의 등을 맺음말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의 공식통계상 청년의 연령기준은 15~29세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령기준인 15~24세보다 넓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 남성의 군복무 의무, 자녀독립이 늦은 문화적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김유빈·최충, 2017).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 표본이 2007년 기준 만15~29세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ILO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다만 첫 일자리의 질을 분석함에 따라 첫 직장 진입시점 연령이 대부분 만 15-29세에 포함되지만, 일부 표본은 30세 이상인 경우도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청년취업자의 직장이동 및 임금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노동 시장 정착과정에서 초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탐색(job shopping)과정이므로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연구(Topel & Ward, 1992; Neal, 1999; 김동규·어수봉, 2010)와 청년취업자의 잦은 직장이동은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문영만, 2017; 이병희, 2002; Light & McGarry, 1998; Neumark, 2002)가 있다. 해외연구와 국내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저자	분석자료	주요 분석방법	주요 결과
해외 연구	Topel & Ward (1992)	사업체-근로자 연계추적자료 (LEED : the longitudinal employee-employer data, 1957~1972)	•Within-Job Growth, Between-Job Wage Growth, A Model of Mobility Decisions	•사업체-근로자 연결추적자료(LEED) 1957~1972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남성 청년의 직장이동과 임금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노동시장 초기 10년간 미국의 남성 청년근로자는 평균 7번의 직장을 경험하였고, 이는 전체 생애기간(약 40년)을 기준으로 총 직장이동 횟수의 약 3분의 2에 해당함
	Keith and McWilliams (1995)	NLSY (1979~1988)	•OLS(Determinants of Wages, The Wage Effects of Cumulative Mobility)	•누적기준의 직장이동(cumulative job mobility)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동 횟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이직사유별로 보면 직장이동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남
	Light & McGarry (1998)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OLS,IV/GLS (instrumental-variables generalized least-squares) 이용	•직장이동 경향과 시간 불변인 개인과 직업의 관찰 불가능한 상관관계 등을 통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동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이동이 적은 근로자 집단)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음을 발견함
	Neal (1999)	NLSY (1979~1992)	•two-stage search policy implied by model	•청년 남자는 1979~1992년 동안 평균적으로 4.2회의 직장이동을 하였으며, 이 중 산업 및 직업의 변화를 함께한 경력간 이동률은 약 55% 수준에 다다름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오래될수록 경력간의 이동은 감소하고, 점차 경력 일처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함
	Parrado, Caner, Wolff (2007)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Logit estimation, Earnings regressions	•근로자가 후기기간에서 직업 및 산업의 변화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하였고, 또한 남성의 직업 및 산업변화가 소득의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함.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했음(반면 여성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 또한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한 더 나은 소득이 있는 남성일수록 직업 또는 산업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음

	저자	분석자료	주요 분석방법	주요 결과
	Gius (2014)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first and second-stage equations	• 동일 산업이나 직업내에서의 직업이동은 둘다 임금 상승을 가져오나 직업과 산업이 함께 변하는 것은 모두 임금감소 효과가 나타남
국내 연구	이병희 (2002)	한국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2000년)	•기간분석 및 임금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첫 일자리 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며, 직업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직장경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침. 따라서 노동시장 경력 초기에서의 잦은 직장이동은 더 좋은 일자리로의 탐색과정이 아닐 수 있음
	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YP2001의 2~3차년도 조사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고용상태 이행 결정요인 분석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이 불안정 고용상태에 위치할 가능성 있음
	김안국 (2005)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	•임금회귀분석, 프로빗 분석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졸업 후 4년간 평균 취업 횟수는 1.68회이고, 직장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근속 기간이 늘어나함. •취업횟수가 많아질수록 총근속기간은 더 길게 나타났다고, 이동 경험이 많은 대졸학력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 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음
	김혜원 외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2003~2007)	•제1단계는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선택유형을 분석하고 제2단계는 선택교정항이 포함된 OLS분석을 함	•직장을 유지중인 사람들의 직장내 임금상승률은 6%, 실직한 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경험한 경우에는 7%, 실직을 경유한 직장이동은 -10%로 나타남. 실직사유별로 보면, 선별적 해고는 38% 큰 폭으로 임금이 하락하였고, 자발적 사직이나 직장사정에 의한 이직은 7%의 낮은 임금하락이 나타남
	이우정 외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07)	•직장이동의 원인분석은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이용하고, 직장이동의 임금변화 분석은 DD(Difference in Difference) 응용	•결혼 및 부양가족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에서만, 연령은 여성에서 직장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에서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는 이직 선택에 대해 다르게 영향을 미침 •임금변화에서는 직장간 이동은 여성에서만 순임금 변화값이 양(+)의 변화로 나타난 반면, 사직이동은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남 ²⁾
	김은석 (2014)	YP2007의 2~5차년도 조사	•사건사 분석과 콕스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직무만족도와 자발적 이직 발생 시점 간의 관계 분석	•남자와 여자는 취업 후 19개월과 2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0%가 자발적으로 이직함 •자발적 이직을 늦추는 직무만족도 요인은 고용형태 간에 다름
	원지영 (2015)	YP2007의 1~6차년도 조사	•OLS와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 이직이 노동시장성과 (임금, 사업규모 등) 개선을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저자	분석자료	주요 분석방법	주요 결과
	문영만 외 (2017)	YP2007의 3~8차년도 조사	•프로빗 모형, 잠재성장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직률이 낮고,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을수록 이직하는 비율은 높았음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에서는 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금, 고용형태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일치도 변수도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

노동이동과 관련된 국내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이직을 통한 임금 효과(변화)를 중심으로 연구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직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이용된 자료가 대부분 짧은 종단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단기변화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2007) 1~14차 자료를 사용한다, 청년패널조사 직업력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4차(2020년)까지 각 조사차수별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를 통해 청년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변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패널자료이면서 14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이동, 안착 및 정착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최소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노동이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 과정을 밝혀주는 논문으로서 학술 및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III. 충남권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분포 및 특징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주요 인구학적 특성 분포(〈표 2〉, 〈표 3〉, 〈표 4〉)를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 표본 488명 중 42.2%는 이직의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57.8%는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비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45.3%로 여성(39.5%)보다 5.8%p 높은 반면, 이동한 경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남성:54.7%, 여성:60.5%).

2) 직장간 이동은 실업기간을 거치지 않은 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동(이직)하는 것이며, 사직이동은 실업을 경험하고 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동(이직)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발적 사유란 개인적인 사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작업여건 불만족 등을 포함한다.

〈표 2〉 충남권 청년층의 성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206	42.2	102	45.3	104	39.5
1회	145	29.7	67	29.8	78	29.7
2회	82	16.8	37	16.4	45	17.1
3회	32	6.6	13	5.8	19	7.2
4회	16	3.3	5	2.2	11	4.2
5회 이상	7	1.4	1	0.4	6	2.3
전체	488	100.0	225	100.0	263	100.0
평균 이동횟수	1.05		0.91		1.17	
표준편차	1.25		1.06		1.39	
최대 이동횟수	9		5		9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졸이하 학력계층의 비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32.7%, 전문대졸이상 45.0%로 학력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첫 직장에서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동횟수는 1.05회이며 최대 이동횟수는 9회까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층이 평균 이직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권 청년층의 학력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36	32.7	170	45.0
1회	31	28.2	114	30.2
2회	27	24.6	55	14.6
3회	8	7.3	24	6.4
4회	6	5.5	10	2.7
5회 이상	2	1.8	5	1.3
전체	110	100.0	378	100.0
평균 이동횟수	1.35		0.96	
표준편차	1.44		1.18	
최대 이동횟수	9		8	

주 : 학력은 첫 일자리 시점 기준임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역별 분포에서는 충남의 비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41.2%, 대전/세종지역이 42.7%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충남권 청년층의 지역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충남		대전/세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68	41.2	138	42.7
1회	46	27.9	99	30.7
2회	35	21.2	47	14.6
3회	9	5.5	23	7.1
4회	4	2.4	12	3.7
5회 이상	3	1.8	4	1.2
전체	165	100.0	323	100.0
평균 이동횟수	1.08		1.03	
표준편차	1.30		1.22	
최대 이동횟수	9		8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첫 일자리가 대기업인 청년층의 경우 50.5%는 첫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층 취업자 중 36.6%는 이직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으나, 63.4%는 1회 이상 직장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충남권 청년층의 기업규모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중소기업(300인미만)		대기업(300인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107	36.6	99	50.5
1회	90	30.8	55	28.1
2회	56	19.2	26	13.3
3회	20	6.9	12	6.1
4회	12	4.1	4	2.0
5회 이상	7	2.4	0	0
전체	292	100.0	196	100.0
평균 이동횟수	1.21		0.81	
표준편차	1.36		1.02	
최대 이동횟수	9		4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첫 일자리 진입단계부터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에 직면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직을 경험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 일자리 진입시점부터 일자리의 질(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양극화되면서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격차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라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기간을 분석한 것으로(〈표 6〉, 〈표 7〉), 첫 일자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이동경험 0회)은 평균적으로 지속기간이 7.84년(남성: 8.09년, 여성: 7.60년, 충남: 7.92년, 대전/세종: 7.81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는 평균 3.48년의 지속기간을 보였으나, 2번째 일자리에서는 평균 4.52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2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는 평균 2.49년의 지속기간을 보였으며, 2번째 일자리에서는 평균 3.11년, 3번째 일자리에서는 평균 3.48년으로 늘어났다. 즉, 1회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2번째 일자리, 2회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번째 일자리에서 상당수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안착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지속기간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 지속기간이 이전단계에서의 평균 일자리 지속기간에 비해 비교적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동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³⁾는 최근에 관측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지속기간이 다소 짧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기간(성별)

(단위: 년)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전체	1번째 일자리	7.84	3.48	2.49	2.24	2.10
	2번째 일자리		4.52	3.11	2.01	1.75
	3번째 일자리			3.48	2.77	1.85
	4번째 일자리				3.49	3.17
	5번째 일자리					3.05
남성	1번째 일자리	8.09	3.69	2.49	2.62	2.47
	2번째 일자리		4.95	3.62	2.51	2.13
	3번째 일자리			3.94	2.94	2.33
	4번째 일자리				4.47	4.92
	5번째 일자리					3.88
여성	1번째 일자리	7.60	3.29	2.50	1.98	1.93
	2번째 일자리		4.15	2.69	1.67	1.56
	3번째 일자리			3.11	2.64	1.64
	4번째 일자리				2.82	2.38
	5번째 일자리					2.67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3) 여기서 안착한 일자리의 의미는 현재 시점(가장 최근에 관측된 시점)에서 이직자의 현재 근무 직장을 안착한 직장으로 정의한 것으로, 이후에도 다음 직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있다.

〈표 7〉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기간(지역별)

(단위: 년)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충남	1번째 일자리	7.92	3.68	2.59	3.50	1.02
	2번째 일자리		5.29	3.51	1.70	1.44
	3번째 일자리			3.86	2.79	1.85
	4번째 일자리				3.75	4.10
	5번째 일자리					3.54
대전/세종	1번째 일자리	7.81	3.38	2.43	1.75	2.46
	2번째 일자리		4.16	2.81	2.13	1.86
	3번째 일자리			3.20	2.76	1.85
	4번째 일자리				3.39	2.86
	5번째 일자리					2.89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이동경험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임금을 보면(〈표 8〉, 〈표 9〉), 이직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291.8만원으로 1회 이상 이동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마지막 시점 기준 248~284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유지집단의 경우, 남성 331.8만원, 여성 251.5만원, 충남 295.6만원, 대전/세종 290.1만원으로 확인된다. 반면, 이직경험 있는 집단내에서는 이직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착(안착)한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직전 일자리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성별)

(단위: 만 원)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전체	1번째 일자리	291.8	209.4	175.3	183.0	157.7
	2번째 일자리		261.9	224.3	192.6	183.7
	3번째 일자리			260.9	239.7	200.1
	4번째 일자리				284.1	213.7
	5번째 일자리					248.3
남성	1번째 일자리	331.8	223.2	189.1	197.2	187.5
	2번째 일자리		295.7	258.2	206.5	233.7
	3번째 일자리			314.2	258.8	246.6
	4번째 일자리				316.5	267.3
	5번째 일자리					340.0
여성	1번째 일자리	251.5	197.4	164.5	173.3	144.1
	2번째 일자리		232.5	196.6	183.1	161.0
	3번째 일자리			217.2	226.6	179.0
	4번째 일자리				261.9	189.3
	5번째 일자리					206.6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표 9〉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지역별)

(단위: 만 원)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충남	1번째 일자리	295.6	200.1	178.0	211.1	140.5
	2번째 일자리		253.4	224.9	194.3	166.3
	3번째 일자리			263.8	275.0	183.1
	4번째 일자리				325.1	187.1
	5번째 일자리					225.0
대전/세종	1번째 일자리	290.1	213.4	173.5	172.1	163.4
	2번째 일자리		265.9	223.9	191.9	189.5
	3번째 일자리			258.8	225.9	205.8
	4번째 일자리				268.1	222.5
	5번째 일자리					256.1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 한국고용정보원

IV. 실증분석

1. 자료 및 분석모형

충남권(대전·세종 및 충남)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 및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자료는 현재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 및 공개하고 있는 청년패널 1-14차(2007~2020년) 직업력 자료이고, 추가적으로 1~14차 전체자료도 연결하여 분석한다. 청년패널조사 자료 중 직업력 자료는 2007년 1차 조사부터 2020년 14차 조사까지 첫 일자리, 경험일자리, 현재 일자리 등 일자리 경험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일자리 변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패널자료이면서 14년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정착(안착) 과정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이직)이 노동시장 성과 중 대표적인 지표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Pooled OLS(합동 OLS) 모형을 사용한다. pooled OLS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함수를 이용할 것이며, 종속변수(wage)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이고, 설명변수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금함수 추정모형⁴⁾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4)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임금 결정요인은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하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들과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업 및 산업분야 등 직장속성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여 모형

사용되는 벡터(성별더미, 학력 더미, 연령, 연령제곱, 현 일자리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더미, 산업 더미, 직업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더미 등)와 이동여부(move) 더미이다(황광훈, 2019).

$$\begin{aligned} reallogwage_i = & \alpha_0 + \alpha_1 age_i + \alpha_2 sex_i + \alpha_3 edu + \alpha_4 marry_i + \alpha_5 joptype_i + \\ & \alpha_6 size_i + \alpha_7 jobtime_i + \alpha_8 tenure_i + \alpha_9 san_i + \alpha_{10} job_i + \\ & \alpha_{11} satis_i + \alpha_{12} mismatch_i + \alpha_{13} move_i + \epsilon_i \end{aligned}$$

2. 실증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연령은 27.9세이고, 남녀 비율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18%, 전문대졸 23%, 대졸이상 59%로 나타났고, 기혼자가 19%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속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석대상인 임금근로자 중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91%, 임시/일용직 9%로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 40%, 중기업 18%, 대기업 42%로 구성되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3.4시간, 현직장근속기간은 평균 3.63년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조업’ 22%, ‘도소매/숙박/음식업’ 15%,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11%, ‘건설업’ 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이 22%,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15%,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14%,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가 22%, 기술 미스매치(부족+과잉)는 16%, 전공미스매치는 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이직횟수는 0.48회로 확인되었다.

을 확장시켜 분석하였다.

5) 미스매치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 등 3가지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스매치를 측정하였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로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경우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 과잉 및 기술과잉”으로, “④ 수준이 높다, ⑤ 수준이 아주 높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부족 및 기술부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③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非) 미스매치로 “적정학력 및 적정 기술”로 간주하였다. 전공일치의 경우는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 미스매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 는 비(非) 미스매치 상태로 보았다. 또한 미스매치 중 학력/기술 수준에서 “과잉”인 경우는 하향취업으로, “부족”인 경우는 상향취업 상태로 간주하였다(황광훈, 2018).

〈표 10〉 기초통계량(N=3,295)

변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연령		27.96	4.52	
남성		0.50	0.50	
학력	고졸이하	0.18	0.38	
	전문대졸	0.23	0.42	
	대졸이상	0.59	0.49	
기혼		0.19	0.39	
종사상지위	상용직	0.91	0.29	
	임시/일용직	0.09	0.29	
기업 규모	소기업	0.40	0.49	
	중기업	0.18	0.38	
	대기업	0.42	0.49	
주당평균근로시간		43.47	6.65	
현직장근속기간		3.63	3.59	
산업	제조업	0.22	0.41	
	건설업	0.04	0.19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11	0.32	
	도소매/숙박/음식업	0.15	0.3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48	0.50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35	0.48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1	0.31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0.22	0.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3	0.1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0.15	0.35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14	0.35	
미스 매치	학력	적정학력	0.78	0.42
		학력부족	0.17	0.37
		학력과잉	0.06	0.23
	기술	적정기술	0.84	0.37
		기술부족	0.10	0.30
		기술과잉	0.06	0.24
전공불일치		0.08	0.27	
이직횟수		0.48	0.50	
로그실질월평균임금		5.40	0.37	

지금부터는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 경험이 없는 비이직자 집단에 비해 임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직의 유형이 산업과 직업에 따라 동일 산업 및 직종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와는 반대로 동일 산업 또는 직종을 벗어나 타 산업 및 타 직종으로 이동한 경우에 따라 임금 변화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추정하도록 한다. 이직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한다.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직업)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한 이후,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 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추가시켜 그 계수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권의 청년취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경험 집단은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3%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을 통한 임금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중인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한 경우는 저임금을 동반한 이동이거나 임금수준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산업 및 직업간 이동 유형에 따라서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이직이, 직업에서도 직업내 이직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이직자 그룹 기준으로 산업내 이직자는 6.4%, 직업내 이직자는 6.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기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직장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효과는 적정집단에 비해 학력과잉, 기술과잉, 전공불일치 등 모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pooled OLS) : 충남권 전체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821***	0.161	3.824***	0.162	3.826***	0.162
연령		0.047***	0.011	0.047***	0.011	0.047***	0.011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성별(기준:여성)		0.143***	0.011	0.143***	0.011	0.143***	0.011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62***	0.016	0.063***	0.016	0.063***	0.016
	대졸이상	0.145***	0.016	0.146***	0.016	0.146***	0.016
혼인여부(기준:미혼)		0.057***	0.014	0.058***	0.014	0.058***	0.014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223***	0.018	0.223***	0.018	0.223***	0.018
사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47***	0.014	0.048***	0.014	0.048***	0.014
	대기업	0.124***	0.012	0.124***	0.012	0.124***	0.012
주당평균근로시간		0.007***	0.001	0.007***	0.001	0.007***	0.001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현직장 근속기간		0.013***	0.002	0.013***	0.002	0.013***	0.002
산업 (기준:제조업)	건설업	-0.041	0.026	-0.041	0.026	-0.040	0.026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020	0.019	0.020	0.019	0.020	0.019
	도소매/숙박/음식업	-0.123***	0.021	-0.122***	0.021	-0.122***	0.0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130***	0.015	-0.130***	0.015	-0.130***	0.015
직업 (기준: 경영/사무/금융/ 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44***	0.017	0.144***	0.017	0.144***	0.017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 경찰/소방직/군인	0.051***	0.015	0.052***	0.015	0.051***	0.01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90***	0.028	0.090***	0.028	0.090***	0.02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009	0.019	-0.009	0.019	-0.009	0.019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 림어업직	0.014	0.018	0.014	0.018	0.014	0.018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34**	0.014	-0.034**	0.014	-0.034**	0.014
	학력과잉	-0.012	0.025	-0.012	0.025	-0.012	0.025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35**	0.017	0.035**	0.017	0.035**	0.017
	기술과잉	-0.103***	0.024	-0.103***	0.024	-0.103***	0.024
전공불일치(기준:전공일치)		-0.044**	0.019	-0.044**	0.019	-0.044**	0.019
이직경험(기준:비이직)		-0.063***	0.011				
산업 (기준:비이직)	산업내 이직			-0.064***	0.011		
	산업간 이직			-0.057***	0.019		
직종 (기준:비이직)	직종내 이직					-0.064***	0.011
	직종간 이직					-0.055***	0.020
표본수		3,295		3,295		3,295	
Adj R-Sq		0.472		0.472		0.472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임

다음으로 충남권을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표 13〉). 첫째, 대전지역 청년취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1% 낮은 임금을 받고, 충남지역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2%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으로 지역을 세분화시켜 분석하여도 공통적으로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낮음이 확인된다. 둘째, 산업 및 직업간 이동 유형에 따라서는 대전의 경우, 산업에서는 산업간 이직이, 직업에서는 직업간 이직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이직자 그룹 기준으로 산업간 이직자는 7.6%, 직업간 이직자는 8%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충남의 경우는 산업 및 직업간

이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이직자 그룹 기준으로 산업내 이직은 6.8%, 직업내 이직이 6.7%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대전 및 충남지역 모두 기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직장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효과는 적정집단에 비해 학력과잉, 기술과잉, 전공불일치 등 모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pooled OLS) : 대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505***	0.220	3.497***	0.220	3.491***	0.220
연령		0.058***	0.015	0.059***	0.015	0.059***	0.015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성별(기준:여성)		0.113***	0.015	0.112***	0.015	0.112***	0.015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51**	0.022	0.050**	0.022	0.051**	0.022
	대졸이상	0.127***	0.022	0.125***	0.022	0.126***	0.022
혼인여부(기준:미혼)		0.051***	0.019	0.050***	0.019	0.051***	0.019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233***	0.024	0.233***	0.024	0.232***	0.024
사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44**	0.018	0.044**	0.018	0.044**	0.018
	대기업	0.105***	0.015	0.104***	0.015	0.104***	0.015
주당평균근로시간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현직장 근속기간		0.012***	0.003	0.011***	0.003	0.011***	0.003
산업 (기준:제조업)	건설업	0.004	0.037	0.004	0.037	0.004	0.037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045	0.027	0.046*	0.027	0.046*	0.027
	도소매/숙박/음식업	-0.072**	0.029	-0.073**	0.029	-0.072**	0.0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082***	0.024	-0.082***	0.024	-0.082***	0.024
직업 (기준: 경영/사무/금융 /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78***	0.023	0.178***	0.023	0.179***	0.023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 경찰/소방직/군인	0.045**	0.019	0.044**	0.019	0.045**	0.01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111***	0.033	0.110***	0.033	0.111***	0.033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012	0.024	-0.011	0.024	-0.010	0.024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 농림어업직	-0.011	0.028	-0.010	0.028	-0.010	0.028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29	0.018	-0.030	0.018	-0.030	0.018
	학력과잉	-0.045	0.037	-0.046	0.037	-0.046	0.037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38	0.023	0.038*	0.023	0.038	0.023
	기술과잉	-0.104***	0.032	-0.103***	0.032	-0.103***	0.032
전공불일치(기준:전공일치)		-0.032	0.027	-0.032	0.027	-0.032	0.027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이직경험(기준:비이직)		-0.061***	0.015				
산업 (기준:비이직)	산업내 이직			-0.058***	0.015		
	산업간 이직			-0.076***	0.025		
직종 (기준:비이직)	직종내 이직					-0.058***	0.015
	직종간 이직					-0.080***	0.027
표본수		1,904		1,904		1,904	
Adj R-Sq		0.477		0.476		0.477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임

〈표 13〉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pooled OLS) : 충남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187***	0.241	4.223***	0.242	4.214***	0.241
연령		0.036**	0.017	0.033**	0.017	0.034**	0.017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기준:여성)		0.177***	0.017	0.179***	0.017	0.178***	0.017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84***	0.023	0.089***	0.023	0.087***	0.023
	대졸이상	0.168***	0.023	0.175***	0.024	0.175***	0.024
혼인여부(기준:미혼)		0.060***	0.021	0.062***	0.021	0.061***	0.021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196***	0.027	0.196***	0.027	0.196***	0.027
사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40*	0.022	0.042*	0.022	0.041*	0.022
	대기업	0.124***	0.019	0.125***	0.019	0.124***	0.019
주당평균근로시간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현직장 근속기간		0.014***	0.003	0.016***	0.003	0.015***	0.003
산업 (기준:제조업)	건설업	-0.065*	0.039	-0.064*	0.039	-0.061	0.039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033	0.030	0.033	0.030	0.036	0.030
	도소매/숙박/음식업	-0.174***	0.034	-0.173***	0.033	-0.172***	0.0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177***	0.022	-0.177***	0.022	-0.174***	0.022
직업 (기준: 경영/사무/금융 /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084***	0.027	0.084***	0.027	0.085***	0.027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 경찰/소방직/군인	0.065***	0.023	0.068***	0.023	0.064***	0.02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13	0.059	0.010	0.059	0.009	0.059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014	0.031	-0.015	0.031	-0.017	0.031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 농림어업직	0.017	0.024	0.018	0.024	0.017	0.024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37*	0.021	-0.038*	0.021	-0.037*	0.021
	학력과잉	0.013	0.035	0.013	0.035	0.011	0.035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25	0.026	0.024	0.026	0.025	0.026
	기술과잉	-0.085**	0.038	-0.084**	0.038	-0.085**	0.038
전공불일치(기준:전공일치)		-0.057**	0.029	-0.059**	0.029	-0.058**	0.029
이직경험(기준:비이직)		-0.062***	0.017				
산업 (기준:비이직)	산업내 이직			-0.068***	0.018		
	산업간 이직			-0.022	0.029		
직종 (기준:비이직)	직종내 이직					-0.067***	0.018
	직종간 이직					-0.021	0.030
표본수		1,391		1,391		1,391	
Adj R-Sq		0.478		0.479		0.479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임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4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등 충남권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이동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일자리 이동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권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주요 인구학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42.2%는 이직경험을 하지 않고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57.8%는 1회 이상 일자리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취업자 중 첫 일자리가 대기업인 청년층의 경우 50.5%는 첫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층 취업자 중 36.6%는 이직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다.

둘째, 이직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1회 이상 이동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경험 집단 내에서는 이직을 통해 마지막으로 안착한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이전에 경험한 일자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pooled OLS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의 여부 및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 6.3%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 이직자는 6.4%, 직업내 이직자는 6.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임금상승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저임금이 동반된 이동이거나 임금수준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넷째, 다음으로 충남권을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청년취업자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1% 낮은 임금을 받고, 충남지역의 경우 이직자는 비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2%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으로 지역을 세분화시켜 분석하여도 공통적으로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낮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들을 간략히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직장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효과는 적정집단에 비해 학력과잉, 기술과잉, 전공불일치 등 모두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등 1차 노동시장에 진입에 성공한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가 첫 직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년구직자는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입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의 양적 규모는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청년층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희망하는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탐색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학교에서 첫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간 및 비용적 소모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청년구직자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 및 향상시켜야 하겠다.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자치단체는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입과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및 고용불안정 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내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및 육성해 나가야 하겠다. 중소기업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효과적인 지원정책 및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의 성과도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략·특화 산업 및 신규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창출이 우수한 강소기업 육성 필요하겠다. 지역 특성을 살려 고부가가치 융복합 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주력, 특화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전략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해야 하고, 아울러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주력산업을 4차산업 기반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의 경우도 수도권 및 경남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지역내에서 일자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등이 모두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지역내 기반들이 구축 및 유지된다면, 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할 것이며, 만약 타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출신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며, 지역불균형에 따른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충남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 및 안착(정착) 과정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노동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직장간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에 실업이나 비경황을 경유한 경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 및 육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유형에 대해서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하였다. 둘째, 이직의 사유(자발적 및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분석내용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및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 김성훈, 최민식. 2008. “직장이동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안준기. 201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김동규, 어수봉. 2012.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 안착과정과 전공별 차이”.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1-21.
- 김미란, 민주홍. 2011. “한국노동시장의 남녀 직장이동 요인별 차이와 직장이동 유형별 임금 변화”. *노동경제논집* 35(2): 117-146.
- 김안국. 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노동경제논집* 28(3): 39-76.
- 김은석. 2014. “청년근로자의 직무만족이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47-64.
- 김정숙. 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혜원, 최민식. 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1): 29-57.
- 문영만, 홍장표. 2017.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산업노동연구* 23(2): 195-230.
-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원지영. 2015. “청년층 이직의 결정 요인과 효과-직무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6: 348-376.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 이영민, 임정연. 2010.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기업교육연구* 12(1): 129-153.
- 이우정, 최민식. 2012. “한국노동시장의 남녀 직장이동 요인별 차이와 직장이동 유형별 임금 변화”. *노동경제논집* 35(2): 117-146.
- 황광훈. 2018. “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산업노동연구* 24(2): 181-214.
- 황광훈. 2019.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137-172.
- 황광훈. 2020.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43(2): 41-74.
- 황광훈. 2022. “충남지역 대졸 청년층의 취업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결정요인 분석”. *충남연구* 6(1): 23-44.
- Light A, McGarry K.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276-286.
- Neal D. 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2): 237-261.
- Neumark D. 2002. “Youth Labor Markets in the U.S.: Shopping Around vs Staying put.” *NBER Working Paper*. 6581.
- Robert H. Topel, Michael P. Ward.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39-479.
- Parrado, Caner A, Wolff E. 2007. “Occupational and industri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Labour Economics* 14(3): 435-455.

Gius M. 2014. "The impact of job mobility on earnings: using occupational and industrial classifications to identify job change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8(2): 181-190.

| 논문접수일: 2022년 09월 01일
| 1차 심사일: 2022년 10월 0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3일

충남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평등 의식 변화 분석연구*

-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

Chungnam Province Sex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Program Development: A Study on
Analyzing Changes in Youth Consciousness
- By Youth, for Youth, of Youth-

이행찬**. 유은비***. 김예은****

Haengchan Lee**. Eunbi Yu***. Yeeun Kim****

* 이 논문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morolee@hanmail.net

(Ph.D. Candidate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unmoon Univ.)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심리학과 코칭심리전공 석사과정 재학중(공동저자) | dmsql3818@naver.com

(Master's course in Industrial Psychology and Coach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

**** 국립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재학중(공동저자) | kimyeun2021@gmail.com

(Bachelor of Arts degree expected in Department of Game Design, Gongju National Univ.)

요 약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된 청소년 범죄의 실태에 따라 청소년의 위태로운 성의식을 재조명하여 건강한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2시간은 성교육, 2시간은 성평등 교육, 2시간은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전후에 사전, 사후 검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평등 교육의 관계 요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폭력과 안전 요인, 성교육의 성과 재생산 건강 요인에 정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둘째, 성 의식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바라는 성교육의 방식은 참여자 중심 소통의 수업이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지 감수성의 증가와 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의 변화에 효과를 보였으며 향후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초석을 제공한다. 특히 점차 성교육의 방향을 인권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과 사회에서도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current environment of rapidly increasing juvenile crime, a program for healthy sex education was developed, conducted, and analyzed by reevaluating participants' sexual awareness. Lack of appropriate sex educa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cause of distorted gender cognition in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conducted in 2019-2020. This study to investigate gender sensitivity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mise of youth-friendly sex education. Presenting comprehensive sex education, including gender equality,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sex education, the program was developed to rais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For this purpose, four 19-year-old male students and four female students attending Cheonan City, Chungcheongnam-do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rogram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six hours, including two hours of sex education, two hour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wo hour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e- and post test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uge the outcome of the intervention.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gender equality,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safe sex eknowledge among the participants. Second, such courses must be held regularly, not only once, to have the most effective impact. Finally, students preferred to have open discussion-centered classes. This program aimed to increase gender sensitivity and raise gender awarenes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articipants' safe sex, gender equality,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providing a valid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sex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 주 제 어
| KeyWords

청소년, 포괄적성교육,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Youth, Comprehensive sex educa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 서론

오늘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형태로 가공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점차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상의 혐오문화로까지 자리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449명을 검거하였다. 이 중 범죄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9%(175명)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으로 10대·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나이는 10대가 50.2%(190명), 20대 38.9%(147명)으로 나타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YTN뉴스, 2021). 2020년에는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여 유통한 'n번방 사건'(쿠키뉴스, 2020) 등이 떠오르며 현 청소년의 위태로운 성의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의식과 성 태도는 청소년기 이전의 경험이나 성 지식 습득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기 전 연령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인해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개편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개편 작업은 2019년 2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유네스코에서는 성 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건강 증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포함하여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새로 개편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포괄적 성교육'을 담고 있으며 국내 여러 인권단체에서 이를 반영한 성교육 안으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교육부는 전혀 움직임을 가지지 않고 있다(박현이, 2019). 이와 더불어 충남의 성교육 경험률은 전국 14위로 전체 평균 70.9% 보다 낮은 수치인 58%를 보이고 있어(교육부, 2020), 충남 청소년들의 성교육 진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향후 진행될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와 사회문화적인 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심리,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Michel Foucault(2004)는 이를 고정된 본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다(정민자, 2013). 이는 섹슈얼리티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유동적이며 가변적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하여,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별 편견 없는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 한다.

이행찬(2019)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 관련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 SNS, 영상, 친구나 선배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에게 학교가 성교육을 경험할 교육의 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정보를 갖기 쉽고, 이러한 성지식의 오류는 혐오문화를 자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성교육의 부재의 원인을 알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청소년들은 학교 성교육에 양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성범죄 사례들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젠더 관련 개념과 의미

1) 성(Sex)과 젠더(Gende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06)에 따르면 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염색체, 호르몬, 그 외 생리적 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의 차이를 낳는 원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성(Sex)과 달리 젠더(Gender)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가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분화된다는 통념을 거부하며 등장한 개념이다(김혜경, 2014). 젠더는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사회문화적인 역할, 태도, 행동, 활동, 자질 등을 의미한다. 즉, 젠더는 인간의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남성성을 내포하는 여자와 남자를 의미한다(손경이, 2019). 젠더에 의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학습한 결과물로, 사회적인 특성과 구조,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2) 섹슈얼리티(Sexuality)

섹슈얼리티는 신체적 차이, 성적 욕구, 출산 능력, 젠더 정체성들과 같거나 서로 다른 신체적,

심리적 가능성이 한데 묶여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즉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 갖는 환상, 태도, 사고, 감정, 신념, 취향, 가치관 등이 사회·문화적 영향하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나수진, 2010).

3)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젠더 감수성이란 ‘젠더 체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는 감수성을 기반으로 성별 권력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성으로도 불린다(홍미리, 2005).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가 얹혀서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감수성이며, 한 사회의 성별화된 구조와 담론을 감지하는 감수성이다(김수자, 2019).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 성주류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젠더감수성 개념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맥락을 함께한다.

4) 젠더기반 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 폭력은 여성과 남성 간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성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이다(김양희, 2013). 젠더기반 폭력은 남성(성)에 대한 여성(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성 역할 규범을 고착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 중 하나이다. 젠더기반 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젠더)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일부 남성과 성 소수자 등 남성성이 결핍되었거나 남성성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젠더기반 폭력이 가해진다(인권운동, 2021).

2. 청소년의 성행동과 성태도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성태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Huerta and Malacara, 1999; 박성정, 1996).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성행동 경험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최희정, 1985). 따라서 청소년기에 어떤 성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년기의 성행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권선주, 2008).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성을 바로 알고 인식하며, 바람직한 성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의 성행동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 환경 등이 있다. 또래의 관계(Harvey & Spigner, 1995) 및 교사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 환경(Colabianchi,

2002) 등이 청소년기 성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성태도와 성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성교육을 다각적으로 이해함이 중요하다.

3.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과 하위요인

1)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은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과정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평등과 다양성,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성적(Sexual) 관계 형성 능력에 도움을 준다. 더하여 부모, 친구, 교사, 다른 성인 및 지역 사회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에 사회적 규범, 전통적 신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반영하기도 한다(UNESCO, 2013).

포괄적 성교육은 8가지의 핵심개념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가지의 핵심개념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이고, 연령 집단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하위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세 가지의 교육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성교육의 방향을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바람직한 성평등 의식 향상을 중요점으로 다루고 있다.

2) 포괄적 성교육의 하위요인

(1) 성평등 교육

현재 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양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교육 또한 성평등 교육의 일부로 바라보기도 한다. 성평등 교육은 단순히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성별에 부여되는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등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권의 한 영역으로 맞닿아 있다(정윤식,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한 사람의 인권으로서 성에 따른 능력, 속성, 역할 등의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며,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무엇보다 올바른 성 인식과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인성교육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정현미, 2009).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생물학적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시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의 공격성 충동 절제와 통제력 상실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성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한 왜곡된 성관념과 인식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며(정현미, 2009),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재와 관대한 처벌에 의한 처벌제도 부족이 성폭력을 발생시킨다고 바라보고 있다(이혜정, 2015). 이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원인에만 주로 주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지식적 정보와 가치관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생물학적 지식과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라 정의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3) 성교육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950년대에 ‘정결 교육’으로 학교 성교육이 시작되었다(김정옥, 2001), 이후 1960년대에도 ‘정결 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순결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으며(안혜승, 1997),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 당국에서 ‘정결 교육’이나 ‘순결교육’ 대신 공식적으로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성교육은 여전히 생물학적 지식 중심과 순결교육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명선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성과 몸에 대해 말하는 성교육, 즉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성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 성교육이란 보건과 생물 교육으로 분류되는 임신과 출산, 월경, 자위, 피임, 성병 등의 성행동과 신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성평등 인식 선행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검사’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평등 인식수준을 파악한 연구에서 확인할 것은 데이트폭력 허용정도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생각’을 기재하는 곳에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을 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응답자는 모두 남성이었다¹⁾.

1)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몇 응답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응답을 한 양식을 볼 수 있었다. 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83%, ‘받은 적이 없다.’ 1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성평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성 관련 주요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인터넷 67%이나 SNS 54%에서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평등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적이거나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하는 것은 성교육의 유무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하고 올바른 내용의 성교육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현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공통 1위로 나온 것이 피임방법과 임신중절, 에이즈와 성병이다. 이미 성에 노출된 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방법, 즉 콘돔과 같은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성교육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영자 외(2007)에 따르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성교육과 전반적인 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계획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회기마다 다양하게 시도된 진행방법과 토의와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행찬(2020)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심층 면접 조사(FGI)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은 ‘소통하는 교육’이었으며, 현재 청소년들의 성관련 의식이 종합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성폭력 예방, 성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성교육과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학생들은 강사의 교육 혹은 동영상 시청 등의 일방적 소통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지루한 교육’이라고 표현하며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 참여와 소통하는 방식을 중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
- “이딴 설문지 만드는 니 인생이 레전드다.ㅋㅋㅋㅋ”
 - “질문부터 똑바로 하세요. 남녀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하는 답변만 쳐 넣어놓고^^. 학생이라 모를 줄 알았죠? 아무튼 남자가 다 잘못했져잉~~. 아참, 미투운동에서 증거가 뭔지 아세연?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당^^". 여자 창녀는 2000만원 지원하지만 호빠남은?? 이게 유리천장 아니고 뽀니까요^^. 메갈님들 저 사실 여자임.”
 - “미투운동은 무모한 여성집단들이 모여 언론 선동하는 행위이다.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단하다.”
 - “여성정책개발원 같은게 사라져야 한다. 설문지나 평등하게 만들어라”.
 - “남성혐오를 멈춰주세요!”
 - “메갈년들 아주 뿌리를 뽑아야지. 어디 여자가 집밖으로 싸돌아다녀. 우리나라도 아랍권마냥 전부다 히잡, 부르카 같은 거 다 여자는 무조건 필수착용해야 한다. X갈들은 전부 쓸어죽여야 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해당 설문 응답 내용이다.
-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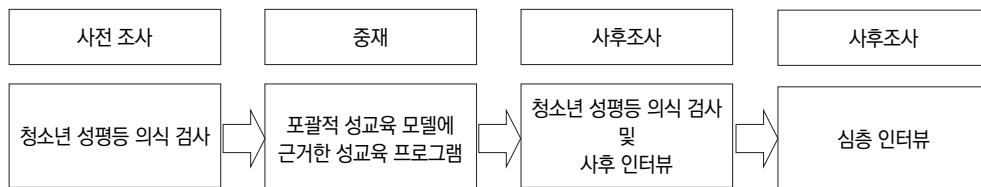
1. 연구 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박수빈(2016)이 연구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찰법, 심층면접,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이행찬(202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정확한 성의식의 원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 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박수빈(2016)은 전통적 강의식 학습보다는 동영상,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자료와 찬반토론, 토의학습, 모둠활동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학생들의 성지식 및 성태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냄을 제시하였다.

사전에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를 진행한 후 충남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후 검사로 진행된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에서 자신이 변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시킬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충남 천안 소재 A고등학교의 동아리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19세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교육 및 설문에 참여한 천안시 ○○고등학교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학생으로 구성하였다.

20~30명 규모의 학급에서 2시간 교육을 통해 참여형 교육을 기획하거나 현장 질문의 과정을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지양하는 교수자, 지식전달 중심의 전통적 교수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윤나현, 2022)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정서·신체·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질의응답과 개인의 생각 작성, 찬반토론, 모둠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2시간은 성교육, 2시간은 성평등 교육, 2시간은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모식도



교육 프로그램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에서 2021년 7월 26일 대면 교육으로 오전, 오후 2회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진행은 교육 후 대면 인터뷰 1회와 2021년 7월 29일 비대면 인터뷰 1회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보조 연구자 2명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보조, 기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 성교육 가이드(2018)의 포괄적 성교육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척도는 8개의 하위척도 즉, 관계,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개정한 이수연(201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2)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1)의 ‘폭력 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현 고등학생의 성평등 연구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의 하위 요인에 기반하여 하위요인의 개념에 맞게 문항을 제작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활용 형태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8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에서 본 설문의 2, 4, 5, 7, 8, 10, 12, 17번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2)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에서 본 설문의 6, 15, 16을 추가하였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1)의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에서 9, 11을 수정, 번안하였다. 또한, 설문의 1, 3, 13, 14, 18, 19번은 8가지 하위요인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가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의 8가지 요인을 성평등, 성폭력 예방, 성교육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척도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인 관계는 친구, 가족 연인 등의 관계에서 성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로, 성을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볼 때 성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는 젠더 이해로, 젠더 평등 혹은 고정관념에 대한 성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네 번째 요인인 폭력과 안전은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로 자신의 의사결정 및 대화의 기술,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도움 및 지원을 찾는 능력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신체와 발달로 성, 생식기, 생리에 대해 알고, 신체 이미지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곱 번째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의 이해를 말한다. 여덟 번째 성과 재생산

건강은 임신과 임신 예방,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HIV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말한다.

응답 양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사용하고 있다.²⁾ 청소년 성평등 의식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의 구성요소

하위요인		문항	문항 수
성평등	관계	1, 2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3, 4	2
	젠더 이해	5, 6, 7	3
성폭력 예방	폭력과 안전	8, 9, 10	3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11, 12, 13	3
성교육	인간의 신체와 발달	14, 15	2
	섹슈얼리티와 성적행동	16, 17	2
	성과 재생산 건강	18, 19	2
총 19문항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후 자신의 의식 변화 내용 및 프로그램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사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 소재의 A고등학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자료를

2) 4점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선택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왜냐 하면 홀수 척도를 기준으로 중간점을 제시하는 것은 선택과제를 최소한의 자원으로 수행하는 최소기준 충족과 불성실 응답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활용될 수도 있다. 반면 중간점 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식을 측정하거나, 변화나 전망을 묻는 질문과 같이 알 수 없거나 예측불가능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중간점 자체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장덕현, 조성점, 2017: 22). 본 설문의 경우는 중간점 제시가 오히려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하였다. 총 8명 중 남학생이 4명(50%), 여학생이 4명(50%) 이었다. 이들은 모두 19세(100%)의 청소년이며, 직전에 졸업한 학교의 형태는 남녀공학-합반(100%)이었다. 모두 성교육 경험이 '있다' (100%)로 응답하였으며, 성교육 경험 방식으로는 특강(62.5%), 시청 각 교재(37.5%)로 응답하였다.

포괄적 성교육 기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의 8가지 하위 영역별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차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성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의 하위 영역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프로그램 전후 성평등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관계($t=-3.21$, $p<.05$), 폭력과 안전($t=-2.38$, $p<.05$), 성과 재생산($t=-.43$, $p<.05$)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t=.60$, $p>.05$), 젠더 이해($t=.83$, $p>.0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t=-1.26$, $p>.05$), 인간의 신체와 발달($t=-2.20$, $p>.05$), 섹슈얼리티와 성적행동($t=-1.93$, $p>.05$)의 영역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는 관계 .56, 폭력과 안전 .21, 성과 재생산 .63으로 나타나, 성과 재생산 분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관계, 폭력과 안전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 성평등 의식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p	
1	사전 A	2.93	.49	7	-3.21	0.015	*
	사후 A	3.50	.46	7			
2	사전 B	3.12	.58	7	-.60	0.563	
	사후 B	3.25	.46	7			
3	사전 C	3.20	.46	7	-.83	0.430	
	사후 C	3.37	.48	7			
4	사전 D	3.20	.46	7	-2.38	0.049	*
	사후 D	3.41	.46	7			
5	사전 E	3.37	.48	7	-1.26	0.250	
	사후 E	3.58	.46	7			
6	사전 F	3.12	.64	7	-2.20	0.064	
	사후 F	3.56	.49	7			
7	사전 G	2.81	.59	7	-1.93	0.095	
	사후 G	3.12	.44	7			
8	사전 H	3.12	.58	7	-.43	0.000	*
	사후 H	3.75	.46	7			

1: 관계, 2: 가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3: 젠더 이해, 4: 폭력과 안전,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7: 섹슈얼리티와 성적행동, 8: 성과 재생산 건강

2. 인터뷰 결과분석

1) 사전-사후 인터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에서 2021년 7월 26일 대면 교육으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를 진행한 후 충남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후 검사로 진행된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에서 자신이 변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시킬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3〉 인터뷰 대상

연번	대상	성별	연번	대상	성별
1	A	여	5	E	남
2	B	여	6	F	여
3	C	남	7	G	여
4	D	남	8	H	남

※ 인터뷰 대상은 A~H로 제시

교육을 받은 후 객관 설문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해당 변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생각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일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마다 받아들이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 지점이 상이했으며 성의식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미디어나 일상에서 당연하게 마주했던 젠더 불평등 상황을 다른 시선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알지 못했던 성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 교육 후 성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된 시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의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보이는 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보인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사전-사후 검사 인터뷰 내용

문항	내용	사전	사후
1	연인관계에서 스킨십을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F : 연인관계에서 스킨십은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했다.	연인관계에 스킨십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G : 상대가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동의 부분을 듣고 연인관계에 스킨십이 다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항	내용	사전	사후
4	적과 직접 교전이 이루어지는 지상 전투에 여군을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	D: 힘을 써야 하는 직업에는 여자 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채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H: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를 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직업 성별 고정관념 부분 수업을 듣고 경찰, 군인 등 적합한 능력이 있어 지원했으므로 여성이라고 배치 안 하는 것은 차별이다.
5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A: 상대적으로 여자가 욕하는 일이 남자보다 드물어서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성별 고정관념 부분 수업을 듣고 어떤 성별 이든 욕하는 것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F: 여자가 더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다.	성별 고정관념 관련 수업을 들은 후 남자와 여자가 보기 안 좋은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D: 욕하는 여성의 것으로 생각했다.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거치대가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G: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성별 고정관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조차도 남자 화장실에 유아 변기나 기저귀교환대가 필요한 줄 몰랐다.
7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G: 미디어 속에서 약한 남자를 볼 수 없었다. 항상 여성을 보호하고 강한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다.	미디어 속 차별 찾기 활동을 한 후 여자를 약한 이미지로 비추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8	성폭력을 하는 것은 섹스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이다.	E: 이끌릴 수도 있어서 강한 욕구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	성폭력과 욕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12	데이트를 할 때,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주도하는 편이 낫다.	H: 미디어에서 보았을 때 남자가 결정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H: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바뀌었다.
14	생리통 때문에 결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H: 그동안 생리통이 아픈 줄 알았지만, 어느 정도 아픈 줄 몰랐다.	생리통이 급소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라는 D의 말을 듣고 공감하게 되었다. 아파서 결석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하는 것이다.
16	남자와 여자의 성욕은 비슷하다.	E: 남자의 성욕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듣고 나서 남녀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19	에이즈의 확산은 동성애 때문이다.	A: 동성애라고 확신은 없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성애 때문에 확산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C: 에이즈는 동성 간에만 걸린다고 생각했다.	성병 감염경로를 배우고 나서 에이즈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서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 에이즈의 확산에 대한 이유를 몰랐다.	절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2) 성교육시간의 적절성

성교육 시간으로 적절한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4명)으로 가장 많았고, 2~3시간(3명), 9시간(1명) 순이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2시간씩 나누어 진행하자는 의견이 5명, 총 시간은 30분부터 10시간까지 다양하였다. 성평등 교육은 2시간 혹은 2시간씩 나누어 진행하자는 의견이 6명으로 많았으며, 총 시간은 1시간부터 10시간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A 참여자의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1시간 이하로 진행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 교육하는 것일 뿐,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H 참여자는 학교 정규 교육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배우는 것에 비해 사회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며 학교 성교육 시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많은 참여자들은 비슷한 의견으로 더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현재 성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었다.

시간과 관련한 인터뷰 응답 중 H 참가자의 경우 성교육 내용은 보다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5일에 걸쳐 꾸준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원했다. 상당수의 학생이 여러 차시로 교육을 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은 집중력, 피로도 등의 한계점이 있으며 참여자 집단의 성격에 맞춘 분배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추가를 원하는 교육 내용 분야

교육 프로그램 외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 교육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질문하였다. 응답은 <표 5>와 같다.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구할 수 있는 콘돔과 장소, 피임과 임신의 관계와 같은 성 지식을 원했고, 레디컬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차이, 인권, 동의와 권력 구조, 남성이 받는 성차별과 같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원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청소년 성문화와 젠더 이슈로 함축할 수 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은 토론 등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하며, 교육 중간에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0년 사전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함께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교육의 방향성을 참여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추가 교육수요에 대한 응답 내용

참여자	인터뷰 응답
A	- 토론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이 콘돔을 구하는 방법과 청소년들이 관계할 수 있는 하는 장소, 콘돔이 살 수 있는 콘돔이 있고 살 수 없는 콘돔에 대한 이야기(특수 콘돔) 등을 더 알고 싶다.
B	- 용어 풀이가 도움이 되었다.
D	- 레디컬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차이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문제인 것 같기 때문.)
E	- 인간을 존중하면 서로서로 신뢰하게 되면서 폭력이 사라질 것 같아 인권 교육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F	- 출산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추가하여 현실을 자세히 알고 싶다.
G	- 동의에 대한 권력 구조와 거절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알고 싶고 피임과 임신의 연관 관계 또한 알고 싶다.
H	- 교육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니 남성이 받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아르바이트에서 여성을 더 우대하는 경우)

4) 학교 성교육과의 차이점

본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성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현재 성교육의 문제점과 원하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교육은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시청각 자료만을 사용하며 소통하지 않고, 용어 풀이를 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임을 말하고 있다. 학습자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업은 청소년들의 주도성이 없는 현 성교육의 문제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참여자와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이었다는 점이다. 인터뷰 내용 중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의견을 모으는 질의응답 활동이 학교 교육과 달리 좋은 점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분위기의 교육으로 눈치 보이는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과 개방적인 분위기, 소수의 인원과 더불어 교육 장소가 달라서 집중이 잘 되었다는 점, 라포 형성(몸풀기 활동)이 입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이형찬(2020)의 연구와 같이 성교육의 개선점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6〉 학교 성교육과의 차이에 대한 응답 내용

참여자	학교 성교육	본 프로그램
A	- 교육청에서 시키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시청각 자료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았다.	-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풀이 해주시며 진행해주셨으니 좀 더 나았다.
B	-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질문을 하지 않았고, 학교 교육은 복잡하게 진행된다.	- 본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았고, 질문을 하고 넘어갔다.
C	- 학교에서는 애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항상 똑같이 진행한다.	- 강사가 하나하나 물어봐 주고, 본인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D	- 학교에서는 단편적으로 짧게 이야기한다.	- 눈치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피임법, 자위 등)
E	- 학교에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속도를 맞춰갈 수 있어서 좋았다.
F	- 강의 듣는 인원이 많아서 집중되지 않았다.	- 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것을 상황에 맞춰 예시를 들어주며 더 직관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어 좋았다.
G	- 학교에서는 용어 풀이를 해주지 않았다.	-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라포형성이 되어 좀 더 개방적으로 거리낌 없이 알아갈 수 있어 좋았다. - 자위 등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방식이 학교와 달라서 신선했다.
H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만 들었다.	-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수업의 장점이었고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의견을 내놓고 다른 이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 학교와는 다른 장소라 분위기가 달랐고 집중이 더 잘 되었다.

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변화 요구사항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변해야 할 점을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물어보았고, 응답을 통해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 응답으로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평등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법을 바꾸고 성평등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가 성평등하기 위해 교육, 법, 시설, 태도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표 7〉 성평등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

참여자	인터뷰 응답
A	-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주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변화해서 계급층부터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B	- 성평등 교육을 알리고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C	- 사회의식이 바뀌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같이 정치인들이 법을 바꾸어야 하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야 하며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참여자	인터뷰 응답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성차별적인 채용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페미와 레디컬 페미를 알게 된 것과 두 가지 모두 차이점을 알고, 심하다는 것과 심하지 않다는 기준을 알아야 한다.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교육이 홍보물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인식, 환경(생리컵 등) 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에서 성평등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보다 실질적인 것(오프라인 참여교육)이 필요하다.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초·중학생들에게도 건전한 성평등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한 시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이 늘어나야 한다(평생교육). 세대에 따른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시대적으로 교육의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교육 후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성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중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여성’과 ‘남성’ 외 다른 성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점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전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피임 기구의 종류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남자 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 등과 같은 성 관련 정보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구성한 본 교육은 성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갖도록 돕고 특정 부분에서 참가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본 교육이 의미 있었음을 보여준다.(〈표 8〉 참조)

생리에 관한 추가 질문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더욱 구체적인 교육과 다양한 생리용품의 체험 기회를 원했다. 체험의 기회를 원한다는 부분은 청소년들은 성교육에서 이론으로만 접하는 즉, 시청각 자료만을 활용하는 수업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표 8〉 교육 후 새롭게 알게 된 점

참여자	인터뷰 응답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 이외의 성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설문지 란에 성별 중 ‘기타’가 인상 깊었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단어를 몰랐는데 많이 알게 되었다. - 여러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임 기구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형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참여자	인터뷰 응답
F	- 강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방면으로 친구들도 알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예: 남자 화장실 기저귀교환대)
G	- 상대 성에 대한 2차 성징 발달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H	- 성 소수자와 페미 등 각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러한 교육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상생활에서는 잘 몰랐던 내용을 알아갈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표 9〉 생리에 관한 교육 수요

문항	인터뷰 응답
생리에 관한 교육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D: 학교에서 알려줄 때 샘플을 한 개씩 정도만 가져와서 눈으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가져와서 사이즈나, 이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F: 다양한 생리대의 체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G: 생리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H: 생리대를 쓰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생리대의 종류와 설명을 해주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생리대 사이즈, 종류 등 알게 된다면 생리대 심부름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생리용품에 대해 배웠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F: 생리컵은 여러 번 쓸 수 있고 피부가 안 짓무르고, 면 생리대는 화학용품이 없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교육으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 생리용품에 대해 교육을 할 때 체험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리컵을 쉽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 화장실에서 생리컵을 사용할 때 세면대가 변기 바로 옆에 있다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 G: 많이 접해볼 수 있어야 생리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리컵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H: 경제적인 이유에서 생리컵을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행찬(2019-2020)의 연구에 기반하여 진행한 후속 연구로, 청소년의 성의식을 높이고자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평등 의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사전 설문, 교육, 사후 설문, 심층인터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과정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교육 프로그램과 설문지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을 참고하여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 및 제작하였다.

인터뷰는 설문에서의 내용 외 추가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계, 폭력과 안전, 성과 재생산 건강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성평등 의식 검사에서 증가된 하위요소와 상위요인은 관계-성교육, 폭력과 안전-성폭력 예방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성교육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 특정 영역에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향상된 변화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인터뷰 진행에서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안정적인 참여자 중심의 활동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이형찬(2020)의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참여 방식의 교육방법과 자기 생각의 표현방법으로 포스트잇 사용과 질문하기 활동을 매우 만족해했다.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의 높은 만족도와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감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의식 및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즉,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감지하도록 활동을 조성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청소년 성교육에 참여자 중심의 토론을 추가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이끌어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교육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장기간’ 진행될 필요성을 나타냈다. 김성애(2000)는 미래에 겪게 될 직장 내 성폭력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 H는 성교육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규 교육시간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는 현 학교 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의 물리적 시간이 학생들에게 턱없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전교생을 집단으로 하여 실시하는 대량생산체제의 교육이 아니라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개인의 성의식과 그 욕구에 맞는 전인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오유진, 2007). 또한, 진행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그 변화가 부분적인 변화임을 고려하면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충남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은 성교육 표준안을 활용하고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참고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 일회적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교육의 내용은 양적 시간 증대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진행 방법이나 내용 등 질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소통의 방식을 중심으로 보다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도록 학교 교육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 문화와 법제도적으로 전체적인 변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제도의 개편 및 문화적 변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가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성교육적 접근방식의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개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및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적 특성상 조사 대상수를 크게 확대하기 어려워 제한적인 조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양희, 이수연.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KGES-A) 개발. 여성연구. 136-156.
- 김정옥. 2001. 청년 성교육. 양서원.
- 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 표준화 기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민자. 2013. 신세대를 위한 성과 사랑. 대왕사.
-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얇은 의지. 나남.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1-62.
- 김혜경. 2014. “여성학 강의의 길, 더 넓고 더 깊게 열어 보이기:(사)”. *한국여성학*. 30(4): 269-274.
- 이현숙, 정병훈, 이영훈, 성우석, 하지웅, 이규영, 이민경, 송승훈. 2015.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 성 허용성”. *교육문화연구*. 21(3): 231-252.
- 이혜정. 2015.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탐색-교사 견해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3(1): 167-191.
- 장덕현, 조성겸. 2017.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 결과 비교”. *조사연구*. 18(4): 1-24.
- 전영자, 이현숙. 2007. “성교육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6(6): 1251-1268.
- 나영, 나영정. 2021.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질서에 대항하는 섹슈얼리티:인권-운동. 인권저널. (3).
- 정현미. 2009.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법제화 방안. 법학논집. 14(2): 317-341.
- 김수자. 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 쿠키뉴스. 2020. 'N'번방 사태로 뒤늦게 불붙은 아동성범죄 처벌 논란. 10월 6일.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050006>).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8. 성(sex), 사회적 성(gender), 성(sexuality)은 어떻게 다른가요? 7월 9일.
- YTN. 2021.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절반 10대”...경찰, 9월부터 ‘위장 수사’. 7월 20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201618016024).
- 권선주. 2008. 청소년의 학교 적응 정도에 따른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 고등학교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인문계 여자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수진. 2010.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해 본 영화와 무용 속 몸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 (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빈. 2016.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54-55.
- 손경이. 2019. 젠더 문화와 젠더성 범죄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유진. 2007. 청소년 성문제의 분석과 돌봄 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나현. 2022. '백래시'를 넘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실천하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식. 2021. 초등학교 남교사의 성평등 교육 수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리. 2005. 젠더감수성 (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아내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현이. 2019.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다[뉴스]. 아하!에는 어떤일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ahacenter.tistory.com/658>. (2021년 8월 24일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교육자료]. 여성가족부.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sessionId=KgZagzqKQYGK8Mr1Pzw9m0NS.mogefshp_container21?menuNo=81063000&conId=741. (2021년 8월 10일 검색).
- 교육부. 2020. 제 16차(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 교육부.
- 안혜승. 1997. 바람직한 학교 성교육의 방향. 강원도교육연구. (155): 32-34.
- 이명선, 김배애라, 배화정, 백재희, 최자은. 2010.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컨설팅. 여성가족부.
- 이행찬, 이유진. 2020. 충남청소년성평등의식조사를 통한 성평등교육방안 제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이행찬, 이유진, 사라칸, 김수연. 2019. 청소년 성평등 의식조사; 충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UNESCO. 2013. Young People Today. *Why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Need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United Nation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 UNESCO.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역.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for schools, teachers and health educators*.
- Harvey, S. M., & Spigner, C. 1995.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 multivariate analysis. Adolescence*. 30(118): 253-265.
- Colabianchi, N. 2002.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Health Sciences).

| 논문접수일: 2021년 09월 03일

| 1차 심사일: 2021년 09월 26일

| 2차 심사일: 2022년 0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5일

인구이동과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

Migration and disparity in human capital across regions

박동규* · 홍성호**

Dongkyu Park* · Sunghyo Hong**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제1저자) | dkparkk@kongj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 shong11@kongj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BSTRACT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충남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통한 인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해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개인의 속성들 간 얼마나 상이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은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인구이동에서 순유입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충남의 인구증가가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사회적 요인에 주로 기인함을 제시한다. 하지만, 충남으로의 유입인구와 충남으로부터의 유출인구 간 학력수준은 전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인적자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의 향후 10년 이후 충남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고학력일수록 낮음을 보여주는 회귀분석결과와 일관된다. 그럼에도, 이주시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할 확률이 유입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human capital through population movement centered on Chungnam using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intention to continue living in Chungnam is different across individual attributes using the Chungnam Social Survey.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Chungnam corresponds to a net inflow region in the population movement between 2015 and 2020, suggesting that the population growth of Chungnam is mainly due to social factors, not natural factors. However,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net inflow has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because the educational level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with the inflow to than with the outflow from Chungnam.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lower the intention to continue living in Chungnam after the next 10 years. Nevertheless, the probability of accompanying a spouse when moving or belonging to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relatively high in the inflowing popula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population increase by natural factor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주 제 어 KeyWords

인적자본, 인구이동, 지역 간 불균형, 경제성장, 정주의향

Human capital, migration, disparity across regions, economic growth, intention to reside

I. 서론

충남은 비수도권 지역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지역이었다. 또한, 인구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군지역 중심의 가파른 고령화와 국가 전체적인 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규모의 증가세 역시 수그러든 실정이다. 경제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구증가 추세가 정체되는 것은 일견 당연한 혹은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

지역경제에 있어 인구규모의 중요성은 지방의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로 인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구규모는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고,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척도로서 지방공공재 투자의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혹은 생활인프라의 수준을 좌우한다. 개인이나 가구는 지역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규모는 지역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역의 인구감소는 빈집이나 폐가의 증가를 유발하고,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 이로 인한 수익성의 하락 및 투자의 감소를 야기한다. 지방공공재 투자 감소의 지속은 정주시설이나 생활 인프라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여 생활여건이 악화됨으로써 지역 내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구의 양적 규모와 함께, 인구의 질적 구성-즉, 인적자본-은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원동력 가운데 하나임은 자명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유래 없이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 충남 역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규모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규모를 능가하여 여전히 인구규모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이 집적하고 대학들이 군집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포함하는 북부권과 내포신도시 개발의 특수성에 기인한 홍성군에 한정된다. 강은택 외(2016)는 근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신대학과 산업 간 지리적 일치성이 낮아지며 이러한 경향이 비수도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따라서, 북부권의 경우에도 대학의 지역 내 밀집은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충분한 공급을 장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홍성군의 경우 이주를 통한 인구의 증가가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시기로 한정될 개연성이 있다. 결국, 충남 역시 머지않아 인구규모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적자본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계층의 인구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도내 어느 계층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지,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개인이나 가구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 간 인구이동에 의한 해당 지역인적자본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충남이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 어떠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충남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통한 인적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해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개인의 속성 특히, 학력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생산함수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충남의 인적자본이 인구이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변화가 충남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Romer(1986)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지식자본의 축적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교육투자를 통한 학력수준의 향상이나 생산과정에서의 학습(learning-by-doing) 역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강화하고 이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Lucas, 1988). 즉, 생산현장에서 일정 수준의 인적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몸소 체화되지만(embodied), 교육투자를 통해서도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생산함수에서 노동자수와 함께 노동 효율성 개념의 또 다른 투입요소로 간주된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고학력 혹은 숙련노동자로부터 저학력 혹은 미숙련노동자가 생산기술이나 노하우를 별다른 비용의 지불 없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외부경제와 같이 작용한다.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박현수, 2012). 하지만,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오히려 증가하여 이로 인한 경제성장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도 있다(김종구, 2007). 한편, 인구의 변화는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김용민, 2017). 결국,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지역노동시장과 지역산업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인적자본에 대한 영향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이동의 유형이나 흐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을 통해 충남의 인구규모와 인적자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충남 도민들 가운데 학력수준을 포함한 여러 속성에 의해 구분되는 다양한 계층들 가운데

어느 계층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행태 혹은 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현재의 지역에 보다 오래 거주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 혹은 소속감이 크거나 이주의 거래비용이 보다 큰 경우 이를 테면, 자가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의 확률이 낮을 것이다.

2.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우선, 충남으로 유입하는 인구와 충남으로부터 유출하는 인구 간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이용한다. 충남으로 유입하는 경우 1, 충남으로부터 유출하는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주하는 개인 및 해당 가구의 속성들 이를테면, 가구유형, 주택점유형태, 타 지역 주택소유 여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주택의 건축 이후 경과년수, 경제활동 여부, 연령, 혼인상태, 성, 세대유형, 출생지(광역시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 이후에 이를 이용해 두 집단 간 표본을 매칭한다. 이를 통해, 두 집단 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비교 대상을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통제한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 주택점유형태에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속성 특히,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y_j = \alpha + \beta edu_j + X_j \gamma + \epsilon_j \quad (1)$$

여기서, edu_j 는 개인 j 의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X_j 는 거주지(개별 시군, 읍면동 여부, 도시/농촌/어촌 여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충남 거주기간, 성별, 연령대, 직업,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전체 가구원 대상 분석), 가구원수, 다문화가족 여부, 가구부채 유무 등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y_j 는 10년 후에도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5점 척도)을 나타낸다.

2) 자료와 변수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와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를 활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부문과 가구 및 주택부문으로 나뉘어 제공되나 개별 가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료로 통합되었다. 인구부문자료는 5년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와 다른 경우 광역시도의 수준까지 5년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상태 즉, 졸업, 재학, 수료, 중퇴, 휴학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하여 지역 간 이주하는 사람의 학력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가구의 구성, 주택점유형태 등이 실증분석에 포함된다.

한편,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는 충남 거주 15,000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에 25,12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10년 이후에 충남에 계속 거주할 의향으로 정의되며, 이는 ‘귀하는 향후 10년 후에도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의 응답에 의해 측정된다. 점수별 분포는 1점 3.5%, 2점 8.6%, 3점 19.4%, 4점 42.6%, 5점 25.8%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실증분석 결과

1. 인구이동 실태

타 지역에서 충남으로 유입한 사람은 260,856명으로, 이 가운데 28.2%에 해당하는 73,431명이 경기로부터 이주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¹⁾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주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6%에 이르고, 대전, 세종,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주는 20.7%를 차지한다. 이외의 지역들 중에는 전북이 5.3%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충남으로부터 유출한 사람은 244,137명으로, 유입의 규모에 비해 16,719명만큼 적다. 유입과 마찬가지로 유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경기도 전체 유출인구 가운데 34.9%인 85,142명에 해당한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우의 비율은 58.5%로 유입에서의 해당 비율을 능가한다.

1) 이러한 수치는 북한 혹은 해외에서 유입한 27,434명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은 본 논문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논의에서도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지역에서 충남으로 유입된 인구보다 충남으로부터 해당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가 보다 많은 지역은 세종, 경기, 제주이며, 이 가운데 경기로 11,711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다. 세종으로는 9,605명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제주로는 1,05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반면에, 타 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큰 경우는 충북(4,659명의 순유입), 경남(4,600명의 순유입), 전남(4,394명의 순유입), 광주(3,679명의 순유입), 전북(3,671명의 순유입), 대구(3,549명의 순유입) 등의 순에 해당한다.

〈표 1〉 충남으로의 유입과 충남으로부터의 유출

5년전 거주지	충남으로 유입자수(명)	비율(%)	현거주지	충남으로부터 유출자수(명)	비율(%)	순유입(명)
서울	44,456	17.0	서울	41,582	17.0	2,874
부산	7,555	2.9	부산	4,403	1.8	3,152
대구	6,808	2.6	대구	3,259	1.3	3,549
인천	16,700	6.4	인천	15,995	6.6	705
광주	5,103	2.0	광주	1,424	0.6	3,679
대전	32,803	12.6	대전	31,082	12.7	1,721
울산	4,546	1.7	울산	2,384	1.0	2,162
세종	4,581	1.8	세종	14,186	5.8	-9,605
경기	73,431	28.2	경기	85,142	34.9	-11,711
강원	6,133	2.4	강원	5,621	2.3	512
충북	16,484	6.3	충북	11,825	4.8	4,659
전북	13,786	5.3	전북	10,115	4.1	3,671
전남	8,267	3.2	전남	3,873	1.6	4,394
경북	8,632	3.3	경북	5,221	2.1	3,411
경남	10,115	3.9	경남	5,515	2.3	4,600
제주	1,456	0.6	제주	2,510	1.0	-1,054
합계	260,856	100.0	합계	244,137	100.0	16,719

주 : 북한 혹은 해외에서 충남으로 유입한 자는 27,434명에 해당한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충남으로 이주한 인구의 도내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아산시(16.6%), 당진시(7.6%), 서산시(7.5%) 등의 순으로 높아, 북부권이 전체 유입인구의 65.5%를 차지하여, 이주 역시 도내 인구의 북부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국인 기준 2015년 북부권의 인구비율은 60.5%였으나 2020년에는 62.5%로 상승하였으며,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주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시군별로 유입인구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북부권은 경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에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대전, 그리고 서천군은 전북과 같이 인근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3곳의 전출지는 주로 수도권, 대전,

전북, 충북으로 한정되어, 충남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대다수가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표 2〉 충남으로 유입한 인구의 도내 시군별 분포

현거주지	유입자수	비율(%)	상위 1		상위 2		상위 3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천안시	88,271	33.8	경기	26.8	서울	18.7	충북	9.0
공주시	11,636	4.5	대전	28.1	경기	17.6	서울	16.2
보령시	9,523	3.7	경기	27.2	서울	24.3	전북	9.1
아산시	43,285	16.6	경기	37.0	서울	13.8	인천	6.4
서산시	19,655	7.5	경기	24.1	서울	19.0	대전	8.1
논산시	13,848	5.3	대전	30.0	경기	24.2	서울	11.1
계룡시	11,629	4.5	대전	25.8	경기	19.6	서울	11.7
당진시	19,894	7.6	경기	30.1	서울	19.5	인천	12.1
금산군	5,664	2.2	대전	52.3	경기	10.8	서울	6.7
부여군	5,277	2.0	대전	26.4	경기	23.1	서울	14.3
서천군	3,945	1.5	전북	24.5	경기	24.2	서울	19.4
청양군	2,711	1.0	경기	38.5	대전	16.4	인천	14.1
홍성군	11,762	4.5	경기	33.8	서울	19.7	대전	18.1
예산군	6,355	2.4	경기	34.0	서울	20.2	인천	9.3
태안군	7,401	2.8	경기	37.2	서울	19.1	인천	12.1

주 : 북한 혹은 해외에서 충남으로 유입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2. 인구이동과 인적자본

충남은 순유입 지역에 해당하여, 지역 간 이주가 적어도 양적으로는 충남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자본의 유입이 유출을 능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충남으로 유입된 인구와 충남으로부터 유출된 인구의 인적 구성의 차이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매칭을 위해 성향점수 즉,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유사한 정도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인구에 있어 1인 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주 후에 사글세 혹은 무상(관사, 사택 등)으로 주택을 점유할 확률이 높다. 점유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 등에 비해 단독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주거용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유입인구가 유출인구에 비해 보다 신규의 주택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수	t-값
가구유형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0.181	-1.80
(준거집단 : 1인 가구)	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0.788	-1.73
	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0.098	-0.60
주택점유형태	전세(월세 없음)	-0.100	-1.47
(준거집단 :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0.121	-1.64
	보증금 없는 월세	0.321	1.53
	사글세	1.434	3.12
	무상(관사, 사택 등)	0.838	8.35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0.112	1.69
거처의 종류	아파트	-0.805	-9.75
(준거집단 : 단독주택)	연립주택	-0.622	-3.51
	다세대주택	-1.789	-14.3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324	-1.28
	오피스텔	-1.431	-10.44
주거용 연면적		-0.054	-2.66
건축 이후 경과년수		-0.024	-4.04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0.022	-0.39
연령		0.006	2.54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0.603	7.34
(준거집단 : 미혼)	사별	0.434	2.58
	이혼	0.367	2.91
남성		0.026	0.48
상수항		0.983	4.55
고정효과			
	세대유형	23	
	출생지(광역시도)	17	
관측수		7367	
Pseudo R ²		0.0825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교육 연수(years of schooling)로 정의된 학력수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매칭 이전에는 유입인구가 13.2년으로 유출인구의 13.8년보다 0.6년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매칭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집단 간 차이가 0.2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비록 지역 간 인구이동이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충남의 인구 규모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지역의 인적자본 형성이라는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4a〉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학력수준의 차이

매칭 여부	유입인구	유출인구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13.2	13.8	-0.6	0.07	-8.43
여	13.6	13.8	-0.2	0.07	-3.20

주 : 표본수는 7,367명에 해당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지역 내 인적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된다(Glaeser and Mare, 2001). 따라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충남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매칭 이전에는 유입인구 가운데 62.5%가 경제활동을 하여 유출인구의 해당 비율(65.5%)보다 3.0%p 낮게 나타나며, 이는 학습효과를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서 충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입과 유출 간 유사한 이주로 매칭한 후에 분석하는 경우 유입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유출인구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높아지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b〉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경제활동 여부의 차이

매칭 여부	유입인구	유출인구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625	0.655	-0.030	0.011	-2.59
여	0.658	0.655	0.003	0.012	0.24

주 : 표본수는 7,367명에 해당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최근 귀농 혹은 귀촌의 유행으로 인해, 은퇴자들의 농촌으로의 이주가 활발하다. 하지만, 귀촌의 경우 노후의 전원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 내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입인구의 평균 연령은 매칭 이전에 45.1세로 유출인구의 39.2세에 비해 5.9세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매칭 이후에는 단지 1.2세로 감소하여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충남으로 이주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 인구 즉, 만15~64세 인구의 비율은 매칭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매칭 이후에 유입인구의 해당 비율은 92.6%로 유출인구의 90.8%에 비해 높다.

〈표 4c〉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연령의 차이

변수	매칭 여부	유입인구	유출인구	차이	표준오차	t-값
연령 (N = 7,367)	부	45.1	39.2	5.9	0.38	15.35
	여	40.4	39.2	1.2	0.39	3.10
만15~64세 (N = 7,367)	부	0.864	0.908	-0.044	0.008	-5.76
	여	0.926	0.908	0.018	0.007	2.6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인구이동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은 생산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주한 지역에서의 소비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소비성향은 이주시 배우자의 동반 여부와 동반한 자녀의 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비록 그 정도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매칭의 여부와 상관없이 충남으로 유입하는 경우에 배우자를 동반할 확률이 충남으로부터 유출하는 경우의 해당 확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녀의 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입인구의 평균 연령(45세)과 생산가능인구 비율(86.4%)을 고려할 때, 배우자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음은 향후 이들이 지역 내 인구의 자연증가에 기여할 여지가 큼을 함축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표 4d〉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동반가족의 차이

변수	매칭 여부	유입인구	유출인구	차이	표준오차	t-값
배우자 동반 (N = 8,154)	부	0.543	0.410	0.133	0.011	11.90
	여	0.484	0.410	0.074	0.012	6.12
자녀수 (N = 321)	부	1.92	1.87	0.05	0.09	0.54
	여	1.81	1.87	-0.06	0.09	-0.6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이주를 통한 인구규모 혹은 인적자본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지속성 역시 중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표본자료)는 5년 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주 후 거주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 대신에, 이주 후의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지속성이 상이할 것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세나 월세 등의 차가 점유에 비해 자가 점유의 경우가 이주에 따른 거래비용 이를테면, 부동산취득세 혹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계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유입인구의 이주 후 자가

주택점유의 비율은 51.2%로 유출인구의 해당 비율(49.4%)에 비해 높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매칭 이후에는 유입인구의 주택에 대한 자가 점유의 비율이 40.1%로 9.3%p만큼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4e〉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간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의 차이

매칭 여부	유입인구	유출인구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512	0.494	0.017	0.023	0.74
여	0.401	0.494	-0.093	0.026	-3.55

주 : 가구주에 한정하여 분석되었으며, 표본수는 2,047명의 가구주에 해당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3. 10년 후 정주의향

앞에서, 충남을 중심으로 인구의 유입과 유출 간 상대적 규모와 이로 인한 지역 내 인적자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록 유입하는 인구의 규모가 유출하는 경우에 비해 크나 이주자의 학력수준으로 측정된 인적자본의 변화에서는 충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현재는 인구감소시대이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저출산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 즉,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민들 가운데 어느 집단에서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은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표 5〉는 제2장에서 제시된 식 (1)의 순서형 로짓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귀하는 향후 10년 후에도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5점 척도 즉,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의 답변으로 정의된다. 열 (1)과 (2)는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인데 반해, 열 (3)과 (4)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충남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충남의 인적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와 일관된다. 즉, 이주를 통해 충남의 인적자본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 예측된다.

〈표 5〉 10년 후 충남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결과

변수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가구주	
		(1)	(2)	(3)	(4)
학력 (준거집단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523** (-12.51)	-0.183** (-3.92)	-0.454** (-8.54)	-0.225** (-3.75)
	고졸 이하	-1.271** (-40.17)	-0.366** (-8.31)	-1.136** (-28.07)	-0.375** (-6.68)
	대학 이상	-1.810** (-55.68)	-0.538** (-10.47)	-1.740** (-41.29)	-0.536** (-8.14)
시군 (준거집단 : 천안시)	공주시		-0.285** (-4.80)		-0.256** (-3.27)
	보령시		-0.216** (-3.44)		-0.207** (-2.61)
	아산시		0.021 (0.41)		-0.065 (-0.96)
	서산시		-0.151** (-2.85)		-0.240** (-3.38)
	논산시		-0.286** (-4.88)		-0.316** (-4.23)
	계룡시		-0.050 (-0.72)		-0.038 (-0.43)
	당진시		-0.382** (-6.94)		-0.474** (-6.62)
	금산군		0.290** (4.04)		0.275** (2.89)
	부여군		0.056 (0.76)		0.093 (0.98)
	서천군		0.497** (7.25)		0.532** (5.79)
	청양군		0.325** (4.36)		0.361** (3.63)
	홍성군		0.303** (4.69)		0.174* (2.04)
	예산군		0.094 (1.44)		0.159+ (1.85)
	태안군		0.097 (1.31)		-0.051 (-0.54)
	동읍면		-0.018 (-0.42)		0.055 (0.98)
	면지역		-0.102* (-2.25)		-0.060 (-1.04)
	도농		0.111* (2.48)		0.080 (1.37)
	어촌		-0.429** (-3.30)		-0.734** (-4.34)
주택형태 (준거집단 : 단독주택)	아파트		-0.177** (-4.96)		-0.184** (-3.99)
	연립/다세대		-0.197** (-3.73)		-0.190** (-2.79)

변수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가구주	
		(1)	(2)	(3)	(4)
	그 외		-0.172+ (-1.79)		-0.129 (-1.12)
점유형태 (준거집단 : 자가)	전세		-0.278** (-5.25)		-0.351** (-5.24)
	월세 등		-0.413** (-10.67)		-0.453** (-9.38)
충남 거주기간 (준거집단 : 5년 미만)	5~10년 미만		0.351** (5.55)		0.377** (4.73)
	10~15년 미만		0.531** (8.50)		0.556** (7.02)
	15~20년 미만		0.562** (7.94)		0.622** (6.49)
	20년 이상		1.185** (23.44)		1.267** (20.19)
여성			-0.127** (-3.60)		-0.108* (-2.42)
연령대 (준거집단 : 15~19세)	20대		0.398** (4.06)		1.217** (4.66)
	30대		0.749** (6.95)		1.580** (6.14)
	40대		0.865** (7.97)		1.658** (6.42)
	50대		1.107** (9.86)		1.933** (7.43)
	60세 이상		1.599** (13.88)		2.444** (9.33)
직업 (준거집단 : 전문/관리직)	사무직		0.058 (0.87)		-0.007 (-0.08)
	서비스/판매		0.033 (0.55)		0.111 (1.45)
	농어업		0.168* (2.33)		0.187* (2.10)
	기능/노무 등		0.009 (0.16)		-0.013 (-0.19)
	직업 없음		-0.003 (-0.06)		0.009 (0.11)
종사상지위 (준거집단 : 상용직)	임시근로자		0.029 (0.52)		0.097 (1.28)
	일용근로자		-0.150* (-2.06)		-0.138 (-1.5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008 (0.10)		-0.040 (-0.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093+ (1.81)		0.029 (0.46)
	무급가족종사자		0.114 (1.50)		-0.140 (-0.49)

변수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가구주	
		(1)	(2)	(3)	(4)
월평균 가구소득 (준거집단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011 (0.18)		-0.019 (-0.29)
	100~200만원 미만		-0.035 (-0.56)		0.006 (0.08)
	200~300만원 미만		0.017 (0.26)		0.054 (0.69)
	300~400만원 미만		-0.038 (-0.57)		0.010 (0.12)
	400~500만원 미만		0.000 (0.00)		0.028 (0.30)
	500~600만원 미만		0.220** (2.79)		0.214* (2.08)
	600~700만원 미만		0.187* (2.13)		0.151 (1.27)
	700~800만원 미만		0.171+ (1.72)		0.274* (2.02)
	800만원 이상		0.259** (2.88)		0.281* (2.28)
혼인상태 (준거집단 : 미혼)	배우자 있음		0.048 (0.69)		-0.006 (-0.08)
	사별		0.337** (4.49)		0.235** (2.73)
	이혼		0.064 (0.84)		0.018 (0.22)
가구주와의 관계 (준거집단 : 가구주)	배우자		0.002 (0.05)		
	미혼 자녀		-0.756** (-8.51)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647** (-5.0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1.044** (-3.73)		
	부모(배우자 쪽 포함)		-0.403** (-4.17)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0.641 (-0.90)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0.252 (-1.32)		
	기타 친인척		-1.450** (-2.91)		
	기타 동거인		-0.507+ (-1.94)		
가구원수 (준거집단 : 1인 가구)	2인 가구		0.220** (4.26)		0.201** (3.65)
	3인 가구		0.085 (1.43)		0.070 (1.01)

변수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가구주	
	(1)	(2)	(3)	(4)
4인 가구		0.006 (0.09)		0.014 (0.17)
5인 이상 가구		0.096 (1.27)		0.103 (1.01)
다문화가족 아님		-0.482** (-5.71)		-0.390** (-3.44)
가구 부채 없음		0.113** (4.06)		0.129** (3.43)
관측수	24,998	24,872	14,917	14,835
Pseudo R ²	0.0532	0.1282	0.0512	0.122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충남도, 「충남사회조사」 2021년

시군별로는 천안시에 비해 당진시,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낮은 의향을 나타내고 반대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금산군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의향을 나타내, 지역 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도시, 농촌, 어촌 가운데 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향후 충남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에 비해 연립이나 다세대 혹은 아파트에 거주시 낮은 의향을 나타내고, 점유형태별로는 앞에서의 가정과 부합하게 자가 점유에 비해 차가 점유의 경우에 거주 의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다 긴 거주기간이 해당 개인으로 하여금 이웃과 정주환경에 보다 큰 귀속감이나 애착심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속성별로는 여성이거나 젊은수록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은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사별한 상태인 경우에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에 비해 2인 가구에서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젊은 세대 혹은 1인 가구의 현 거주지 계속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들의 높은 이동성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

IV. 결론

2021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전체와 달리, 충남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북부권에 한정되어 이외의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와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구의 양적인

규모보다는 오히려 인적 구성이나 인구구조와 같은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인적자본임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제시되었으며, 충남은 이주를 통한 인구규모 및 인적자본에서의 변화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충남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통한 인적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해 충남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학력수준을 비롯한 개인의 속성들 간 얼마나 상이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은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인구이동에서 순수입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충남의 인구증가가 자연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사회적 요인에 주로 기인함을 제시한다. 하지만, 충남으로의 유입인구와 충남으로부터의 유출인구 간 학력수준은 전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인적자본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의 향후 10년 이후 충남에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고학력일수록 낮음을 보여주는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와 일관된다. 그럼에도, 이주 시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할 확률이 유입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초저출산의 추세는 인구의 감소가 당연시 되는 ‘뉴노멀’로서 인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의 양적 증가를 위한 노력보다는 이주를 통한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에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현저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의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역시 상호 간 소모적인 경쟁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실효성 역시 의문시 된다. 대신에, 지역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인구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고학력 인구의 정주여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를 통한 충남의 인적자본 증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시·군 수준에서 상대 지역과의 경쟁력 비교가 필요하나 본 논문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인구의 유출입을 분석하는 경우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성휘·최기홍(2015)은 고령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이 내생적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해 상당부분 완화됨을 제시한다. 이는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인적자본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강은택, 강정구, 안아림, 마강래. 2016. “고급인력의 인구이동패턴과 인적자원의 지역 불균형”. *대한부동산학회지*. 34(2): 305-321.
- 김용민. 2017. “일본의 인구변화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일본근대학연구*. 57: 556-571.
- 김종구. 2007.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본 추정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경제연구*. 25(4): 1-29.
- 박헌수. 2012. “소득불균형, 경제성장, 인적자본과의 동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8(1): 97-113.
- 신성휘, 최기홍. 2015. “인적자본이 내생화된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 *한국경제연구*. 33(1): 89-114.
- Glaeser EL, Mare DC. 2001. “Cities and Skil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2): 316-342.
- Lucas R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3-42.
- Romer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논문접수일: 2022년 09월 15일
| 1차 심사일: 2022년 09월 20일
| 2차 심사일: 2022년 10월 0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학술지 「충남연구(Chungnam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대한 논문투고, 심사,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공동편집위원장 2인, 편집위원 15인 이상, 총괄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원내(명예연구위원 포함) 1인과 원외 1인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원 내의 편집위원은 모든 편집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공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총괄간사는 원내 편집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공동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괄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논문 투고규칙과 심사규칙의 심의
2. 투고 논문의 접수와 적합성 판단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사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장 중 1인이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원내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운영과 관련된 행정, 회계 등을 관리하고, 원외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와 관련하여 타 기관, 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원내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총괄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보관하고, 학술지 발간에 따른 회계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등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편집회의에 참석한 원외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보장) 공동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총괄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투고

제9조(논문의 종류)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충남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다음의 논문에 한한다.

1. 연구논문
 2. 정책논문
 3.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연구 결과물
-

- 제10조(논문 등의 작성)** ①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과 직급(국·영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한다. 단, 저자가 다수일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별도 표기한다.
- ② 논문 등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부록 1]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원고의 분량은 제2항에 따른 원고작성방법에 근거하여 A4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는 경우 20매를 초과할 수 있다.

- 제11조(논문 등의 제출)** ①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원고파일을 마감일까지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고 마감일까지 원고파일을 본 연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② 투고논문 등은 발행예정일(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의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논문 등의 투고자는 원고 제출시 투고할 논문 등과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 저작물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 학술지 연구윤리규칙에 따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3]를 연구원 논문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 제12조(심사대상 투고 논문 등)** ① 투고논문 등은 연구원의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② 투고논문 등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대상은 원고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 등의 심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내편집위원장이 비공개로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의 경우, 투고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등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논문 등 심사기준) 투고논문 등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2. 논리 전개와 논문체계의 적절성
3. 연구방법 및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완결성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
5.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

제15조(심사절차) ① 각 투고논문 등의 심사는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한다.

- ② 원내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등을 논문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평가서[별지 서식 4]와 함께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심사의뢰 논문 등에는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 등을 심사하고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내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원내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내편집위원장은 논문 등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게재 가능”으로 확정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정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내에 논문 등을 수정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가 확정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와 더불어 일정기간 내에 논문 등을 수정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심 심사위원들이 해당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다.
 4.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 표절한 것이거나 중복 게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 결정을 취소하며, 연구윤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 등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편집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내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결정 내지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심사비)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절차를 마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발행

제20조(학술지 명칭 및 발행시기) ①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충남연구 (Chungnam Studies)』로 한다.

- ② 본 학술지의 발행시기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21조(논문 등의 게재) ① 논문 등의 게재 순서는 연구 논문, 정책 논문, 기타의 순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 ②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는 각각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제22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발행부수 및 배포방법)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배포방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발행된 학술지의 발행부수 및 배포방법에 의한다.

제24조(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의 논문 등 투고시 제출한 저작물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에 근거하여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저자가 논문 등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원고작성방법

원고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구성

-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은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의 구성

-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은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논문제목 표기

1) 논문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저자명 아래에 영문제목을 작성한다.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Chungcheongnam-do).

2) 논문에 부(副)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主)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2) 표기 방법

- (1) 영문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기재한다.
(예: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2) 표기 방법

-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을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은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3)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hungnam Institute)

② 저자가 복수(주저자와 교신저자)인 경우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hungnam Institute)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hungnam Institute)

5.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국문요약>이라고 표기한 후 700자 내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표기한 후 200단어 내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2) 편집용지는 사용자정의(폭 190mm, 길이 260mm)로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22mm, 좌우 각 25mm, 아래 15mm, 꼬리말 10mm로 지정한다.
- 3) 본문은 신명조 10.5pt(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5%로 통일한다.
- 4)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신명조 9.5pt(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5%로 통일한다.
- 5) 인터넷 자료 인용시에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 6)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 1) 국문원고의 경우,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Ⅰ., 1., 1), (1), ①, 가), (가) 등의 순으로 한다.
-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9. 도표 및 사진

-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상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 1) 인용문헌
 -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 ① 단독연구 : 홍길동(2000)에 의하면 …, Smith(1992: 82~83)는 …, 이들 연구(홍길동, 1996; 홍길동, 1998)에 의하면 …, … 라는 견해도 있다(홍길동, 1999: 25~27).
-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홍길동·김철수(2003)에 의하면 …, Getis and Ord(1992)는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홍길동 외(2001)는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 Maidment et al.(1985: 50~52)은 ….
-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1) 단행본

저자명. 역할어(저자가 편자인 경우). 발행연도. 표제: 부표제(영문은 이탤릭). 역자나 편저자. 판차. 권차. 발행처(영문은 발행지 포함).

이충훈, 임준홍. 2018.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도시재생 로테르담 공중육교 루크싱(Luchtsingel). 미학사.

성경룡 외. 2018.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21세기북스.

Fujiwara A., Zhang J. (eds). 2013. *Sustainable Transport Studies in Asia. Lecture Notes in Mobility*. Springer(Tokyo).

(2) 보고서

저자명. 역할어. 보고서발행연도. 보고서표제(영문은 이탤릭). 발행처. (전자문헌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김기흥. 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분석 및 농지 확보방안. 충남연구원.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0. *Electricity Market Report-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 (<https://doi.org/10.1787/f0aed4e6-en>).

(3) 학회지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자료명(발행단체명)(이탤릭). 권(호): 수록면수.

한수정, 정예은, 정문기. 2019. “공동체의식이 온라인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35(2): 3-18.

李玟靜. 2010. “NPOとの連携による商店街の公共的機能の強化—東京都中延商店街の事例を中心に”. *横浜国際社会科学研究*. 14(5): 77-94.

Lee JK, Jang WS, Chung OS, Lee WS.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y Size, Nestling Age, Provision Rate, and Elevation in the Varied Tit *Parus Varius*”. *Ethology Ecology & Evolution*. 15: 29-36.

(4) 학회발표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자료집명(영문은 이탤릭). 권(호): 수록면수.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와 사회활동 역할의 연령집단별 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5-76.

Kim W, Moon N, Kim JW. 2018. Fare Estimation for Demand Responsive Transport based on a Stated Preference Survey,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25: 5235-5241.

(5) 일반잡지·신문기사

매체명(영문은 이탤릭). 발행연도. 기사명. 게재월일, 수록면수. (인터넷주소).

한겨레. 2019. 세계경제 전망 대폭 하향 IMF - 한국은 2.6% 유지. 4월 9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9413.html).

(6) 학술논문

저자명. 수여연도. 논문명(영문은 이탤릭). 수여기관명 학위명.

권규상. 2006. 초국적기업의 내부조직망을 통해 본 세계도시 네트워크의 진화와 도시의 네트워크 위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曹泳在. 2006. 生態村づくりのための集落評価体系の開発. 東京大學大学院 博士學位論文.
Sung Hyo Hong. 2009. *Three Essays on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Syracuse University, PhD in Economics.

(7) 전자 문헌 또는 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자료명[자료유형]. 발행지: 발행처. 인터넷주소(검색 연 월 일).

김태성. 2002. 중국사 뒷 이야기[전자책]. 서울: 실천문화사. http://www.barobook.com/book/book_detail. (2005년 4월 16일 검색).

(8) 법령

법령명(영문은 이탤릭). 발행연도. 법률 번호(00월 00일 제정/개정/일부개정). 제00조, 제00항.

국토기본법. 2011. 법률 제10758호(5월 30일 개정). 제2조, 제1항.

(9) 내부자료

저자(발행기관). 발행연도. 자료명. 내부자료(미출판 자료).

충청남도. 2019.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 내부자료.

(10) 보도자료

발행기관. 발행연도. 기사명, 월일. 보도자료.

충남연구원. 2020. 충남연구원-코로나19 충남 서비스업 3분기 피해액 1조 1,225억 원 추산, 12월 2일. 보도자료.

11. 감사의 말 등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급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별표 1]

심사절차

유형	심사위원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편집위원회)
5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6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7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편집위원회)
8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위원 B, C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위원 B 재심사, 편집위원회)
10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1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12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13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위원 B, C 재심사)
14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편집위원회)
15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위원 B 재심사, 편집위원회)
16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전원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위원 A, B 재심사, 편집위원회)
19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0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별지서식 1] 논문게재신청서

논문게재신청서

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분야		연구 () 정책 () 기타 ()		원고매수 (A4기준)	매	
신청인	주저자	성명	(영)			
		소속	(직급)			
		연락처	(일반)	(휴대폰)	(email)	
	교신 저자	성명	(영)			
		소속	(직급)			
		연락처	(일반)	(휴대폰)	(email)	
	공동 연구자	성명	(영)			
		소속			email	
		성명	(영)			
		소속			email	
		성명	(영)			
		소속			email	
위 연구물에 대한 충남연구원 학술지 「충남연구」 제 권 제 호에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충남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이용 동의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논문제목	국 문 : 영 문 :		

상기 본인은 본인의 연구결과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충남연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저작물의 DB구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와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과 형식 변경을 허락하고, 이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한다.
2. 저작물을 이미지 DB(PDF)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일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3.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속하여 연장된다.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충남연구원에 이를 통보한 후 승인을 받는다.
5. 배포·전송된 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충남연구원은 논문 이용을 허락한 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3]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논문제목	
소 속	
성 명	
<p>본인은 위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충남연구원 연구윤리규칙을 준수하여 위조·변조·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p> <p>만약 연구윤리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남연구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에 따른 학술지 연구윤리규칙 제24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충남연구원장 귀하</p>	

[별지서식 4]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1/2)	
심사 위원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은행 및 계좌번호				
논문 제목							
항목별 평 가	1. 논문내용의 독창성(30점): 주제설정의 창의성						수정확인 (O,X)
	심 사 평 및 수정지시 사 항						
	평가등급	A) 30 ()	B) 24 ()	C) 20 ()	D) 15 ()	E) 10 ()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의 적절성(20점) - 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수정확인 (O,X)
	심 사 평 및 수정지시 사 항						
	평가등급	A) 20 ()	B) 16 ()	C) 14 ()	D) 11 ()	E) 8 ()	

(2/2)

항목별 평 가	3. 연구방법 및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완결성(10점)					수정확인 (O,X)
	심 사 평 및 수정지시 사 항					
	평가등급	A) 10 ()	B) 8 ()	C) 6 ()	D) 4 ()	E) 2 ()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20점) – 참고문헌, 각주, 초록 등의 정확성 포함					수정확인 (O,X)
	심 사 평 및 수정지시 사 항					
	평가등급	A) 20 ()	B) 16 ()	C) 14 ()	D) 11 ()	E) 8 ()
종합평가	5.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20점)					
	심 사 평					
	평가등급	A) 20 ()	B) 16 ()	C) 14 ()	D) 11 ()	E) 8 ()
윤리규정 준수여부	가() / 부()					
	총 점	() 점				
심사자의 판정의견	판정의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이 유					

학술지 연구윤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칙(이하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충남연구(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및 기타 관련 연구 결과물(이하 논문 등)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이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이 학술지에 논문 등을 기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 등이다.

제3조(윤리규칙 서약) 논문심사자는 투고 논문 등에 대한 심사를 허락할 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이 규칙을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윤리규칙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칙을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

제5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등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학술지 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선입견, 사적인 친분 등을 배제하고, 논문 등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등 심사의뢰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논문 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우호적, 적대적 인간관계 등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 및 저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9조(논문 등 심사의 성실성 및 적절성) 심사위원은 이 학술지의 공동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편집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 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동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등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 등을 저평가 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 등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 등 심사의 타당성) 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의견서에 논문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등 심사의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 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등의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도 안 된다. 또한 논문 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등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

제13조(저자의 의무) 저자는 이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등을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표절의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내지 주장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② 비록 자신의 논문 등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논문 등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로 본다.

제15조(이중게재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다른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논문 등(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등 포함)을 새로운 논문 등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전 논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 등이 이중 게재 내지 중복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조 및 변조의 금지)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위조행위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인용 및 참고표시) 공개된 논문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논문 등 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윤리서약) 저자는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등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 등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위반에 대한 제재

제19조(연구윤리규칙 위반 보고) ① 이 규칙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윤리규칙을 확인시킴으로써 문제를 정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정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실명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칙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에는 익명의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실명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원외편집위원장과 원내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내편집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재적 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이 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제보자 및 상대방), 증인, 참고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한 후 이 규칙 위반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내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 관련자들은 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 윤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피조사자의 보호) ①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자(이하 피조사자)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이 규칙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때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피조사자는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의 절차) 이 규칙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제보자는 이 규칙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 2. 피조사자는 이에 대한 반박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 3. 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내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4조의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본 연구원 소속 직원이 제재 대상인 경우에는 제24조의 제재 이외에도 별도로 인사 위원회에서 일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제24조(제재의 내용) ①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인에 대한 경고, 논문 등 게재의 취소 결정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② 이 규칙을 위반하여 투고한 논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 1. 논문 등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되기 전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
 - 2. 논문 등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해당 논문 등의 “무효” 조치
 - 3. 향후 5년간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 등 게재 금지” 조치
 - 4. 이미 지급한 “원고료의 환수” 조치
- ③ 편집위원장은 위의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 그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충남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임준홍(충남연구원)
	고재종(선문대학교)
편집위원	권규상(충북대학교)
	김기흥(한국유기농업연구소)
	김나경(전남대학교)
	김원철(충남연구원)
	김재우(전북대학교)
	나주몽(전남대학교)
	도수관(울산대학교)
	마강래(중앙대학교)
	박경철(충남연구원)
	손정원(런던대학교)
	윤종주(충남연구원)
	이원익(부산대학교)
	장석인(공주대학교)
	정옥식(충남연구원)
	하봉운(경기대학교)
	허정무(한국교통대학교)
	허중욱(강원대학교)
	Akimasa Fujiwara(히로시마대학교)
	Cui Wei(하북성사회과학원)
	Piao Wenjin(산동성사회과학연구원)
행정간사	최정임(충남연구원)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유 동 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 화	(041) 840-1198
팩 스	(041) 840-1129
인 쇄	(주)디자인시티
ISSN	2765-0006
발간등록번호	11-B553493-000001-09

